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 대 식	연 구 위 원
마 상 진	전 문 연 구 원
심 재 만	연 구 원

연구 담당

박 대 식	연구 위원	연구총괄, 제1장~제3장, 제5장, 제6장 집필
마 상 진	전문연구원	제3장, 제4장 집필
심 재 만	연구 원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극화 현상을 완화 내지 해소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들은 경제활동이나 소득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극화 관련 선행 연구들은 전국 단위나 산업부문 또는 도농간 비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농촌사회 내부의 양극화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따라서 양극화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 결과가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현지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촌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06.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사회적 배제론(social exclusion) 관점에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 6개 부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구명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사회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대체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화 부문별로는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의 부문은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 부문은 최근에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소득·고용 양극화는 일자리 부족, 교육·건강·주거·사회참여 양극화는 경제능력이나 소득 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 주민들은 소득·고용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교육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교육 확충’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사회교육비 지원’과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수준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보건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수준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 개·보수 자금지원’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 사회 참여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연결망 구축’과 ‘찾

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권역별(산간·해안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로 주민의 양극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 인접지역'이 양극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을 보면 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이 많고, ②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이 미흡하고, ③ 사회재정이 취약하고 경제·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고, ④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질적인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농업·농촌에 특화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의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의 다양한 구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 ② 최근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자활계획의 이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③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근로활동' 참여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을 통한 수급탈피를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 조사와 국내외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 고찰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사회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① 소득이나 고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② 농촌의 권역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③ 사후 지원을 통한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문제소지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④ 빈곤 취약 계

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양극화 각 부문별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소득부문에서는 ①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②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④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 ⑤ 중·소농 육성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용부문에서는 ① 고령친화 농업 장려, ② 농외소득 기회 확대, ③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 및 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문에서는 ① 농촌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급식비 지원 확대, ② 방과 후 교육 확대, ③ 농촌 마을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확충, ④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⑤ 농촌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교양교육, 직업교육) 강화, ⑥ 사회교육에 대한 농촌 성인들의 접근성 제고, ⑦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건강부문에서는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②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충, ③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주거부문에서는 ① 농촌지역 개발계획과 주거복지계획 연계, ② 주택자금 지원 확대, ③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마을(복지)회관과 연계한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

사회 참여부문에서는 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② 소외 계층 대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③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 범위와 내용	6
4. 연구 방법	7

제2장 양극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양극화의 개념 정의	11
2. 양극화의 지수화 방법	13
3. 양극화의 원인	17

제3장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1. 실태 조사 개요	23
2. 소득부문	24
3. 고용부문	31
4. 교육부문	36
5. 건강부문	45
6. 주거부문	49
7. 사회참여부문	54
8. 양극화 전반	59
9. 종합	62

제4장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1.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67
2.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71

제5장 농촌사회의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일반적 정책방향 77
2. 양극화 부문별 정책과제 78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83
2. 결론 87

부록 89

Abstract 100

표·그림 차례 101

참고 문헌 10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김홍중 등 2005). 양극화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전병유 등 2006), 소득 양극화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심화·확대되고 있다. 최근 양극화 현상의 특징은 경기순환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후에는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악화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지며, 내수가 침체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여 양극화의 완화·해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2 서론

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부터 대통령 신년사, 국정연설 등을 통하여 양극화 문제가 공론화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국정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고, 양극화의 완화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각종 대통령자문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서 2006년도의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들은 경제활동이나 소득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나 산업부문 또는 도농 간 비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이동필 등 2004), 아직까지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어떤 부문에서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도 농가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경지규모, 소득 등)에서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농촌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양극화 문제는 경기순환이나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사회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세부 목표는 ①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의 측면에서 농촌사회가 어느 정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양극화 지수 등을 적용하여 파악하고, ② 양극화의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③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2.1. 양극화 일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산업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소득, 소비, 고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과 같은 양극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우천식(2005)은 “경제구조변화와 양극화”에서 ① 경제구조변화와 산업·기업의 양극화, ② 경제구조변화와 고용·소득의 양극화, ③ 양극화의 원인,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석인(2005)은 “제조업의 양극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 및 중국 부상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산업발전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원 배분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중 등(2005)은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에서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배제(social and economic exclusion)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들은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하고,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양극화는 각각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선 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과정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 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병유 등(2006)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 과제』에서 양극화 관련 기존의 논의가 개념에 대한 엄밀한 정의 및 분석 방법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극화 개념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하고 양극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에스테반과

4 서론

레이(Esteban-Ray)류의 ‘집단 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여기서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래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 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지수가 훨씬 빠르게 상승했음을 확인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근로소득보다는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고용 및 소득, 소비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용전략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승규 등(2006)은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에서 한국의 양극화 진전에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정책의 초점이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농업 및 농촌부문 양극화

농업 및 농촌부문에 있어서 양극화 관련 선행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농가에 관한 것이며 농촌사회 전체의 양극화 문제를 직접 다룬 경우는 아직 없었다.

박민선(1993)은 “1980년대 농민계층분화의 양상과 그 성격”에서 농민층 분해조건의 변화 및 농민층 분해 양상을 파악하였다. 박민선은 1980년대의 농민계층분화는 2.0ha 이상 층의 상향 이동과 1.0ha 미만 층의 하향 이동(그리고 농외 유출과 겸업화), 중간규모인 1~2ha 층의 겸업농가로서의 성격 강화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분해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한국의 농민층을 중농이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층인 ‘새로운 상층농가’와 노령 침전 층 농가로서 농외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층과 일부 불완전한 겸업농가로 구성되는 다수의 ‘반프로레타리아’로 양극분해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윤수중(2001)은 “농촌 내부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농민충분해와 농민 간 갈등”에서 농민충분해 경향을 파악하고, 농민계층간 갈등 가능성 및 새로운 조직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그는 1980년대까지 나타나던 중농표준화 경향과는 달리 1990년대에 들어서 농민충분해 양상이 양극분해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원이나 용자를 통해 경지규모를 늘리든가 시설투자를 하려는 농민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농에 적극적인 관심이 적은 침전 층이나 겸업농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민 내부의 갈등은 고용-피고용 관계, 수탁자-위탁자 관계 사이에서 나타나고, 상충농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농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호(2005)는 『농업부문 양극화 실태와 정책 과제』에서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 양극화의 원인과 전망,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농가 간에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산업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병행 추진을 통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농촌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준기 등(2005)은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에서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구분한 후 그 특성과 농가경제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를 보면 2000년에 0.2059에서 2003년에는 0.2688로 높아져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고,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에 7.6에서 12.3으로 크게 높아져 농가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농가의 소득 실태를 보면, 평균 농가소득 수준은 고소득농가의 12.8%에 머물러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고, 농외소득 및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5년간 동일농가의 소득실태 분석 결과, 4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함을 보고하였다.

강혜정(2006)은 “농가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에서 1998~

6 서론

2004년 표본농가의 소득격차, 양극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농가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7년간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되어 왔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농업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농업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일차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또한 저소득계층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동질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3. 선행 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산업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사회와 연관되는 것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도 농가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경지 규모, 소득 등)에서 양극화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농가와 비농가를 포괄하는 전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양극화 문제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농촌사회란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을 의미하고, 양극화는 사회적 배제론(social exclusion) 관점에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의 6개 부문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3.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양극화의 개념 정의, 양극화의 지수화 방법, 양극화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부문, 고용부문, 교육부문, 건강부문, 주거부문, 사회 참여부문, 양극화 전반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일반적 정책과제와 양극화 부문별 정책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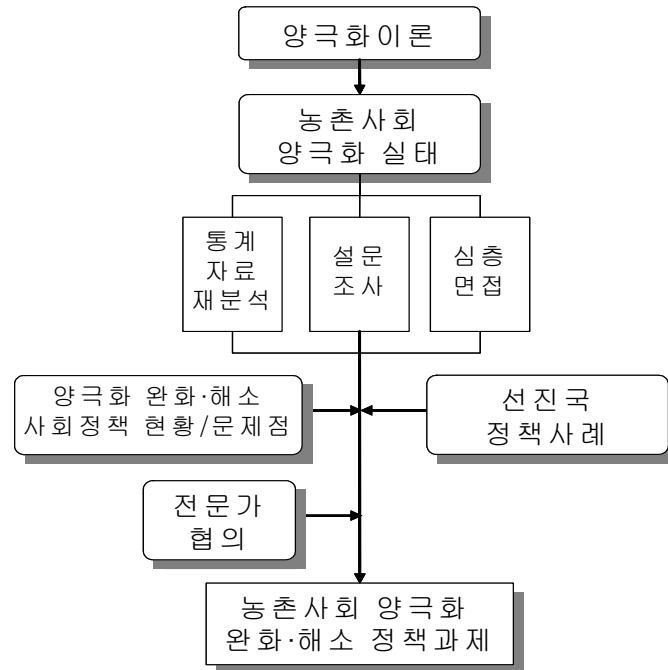
4.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1>에는 연구 추진 체계가 도식화되어 있다.

4.1. 문헌 조사

양극화 관련 이론,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사회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등과 관련한 기초 자료 및 문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4.2.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 자료, 농림부의 ‘농가경제조사’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원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통계조사’의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통계(1998년, 2002년), 교육 수준 조사통계(1997년, 2001년, 2005년), 교육비 조사통계(1996년, 2000년, 2004년), 가정생활만족도 조사통계(1998년, 2002년), 그리고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통계(1998~2004년)는 개선된 ER(Esteban and Ray) 지수 공식을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계산하였다.

4.3.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외에도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에 대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표집은 농촌지역을 인구 증가율, 노인 인구 비율, 대도시와의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산간·해안지역(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인접지역(도시 인접지역), 지역발전이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중산간 농업지역), 평야지대 농업 중심지역(평야 농업 중심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¹ 20세 이상 연령층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할당을 실시하고, 각 지점별로 읍·면 및 통·반·리를 순차로 무작위 추출한 후, 최종 표본가구와 표본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다.²

설문지 초안 마련, 예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설문지는 연구진이 마련하되, 현지 면접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에 위탁하였고, 조사는 2006년 9월 11일~9월 26일에 이루어졌다.

4.4. 농촌 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및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¹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18개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6개의 요인(인구주택 관련 지표, 지형 관련 지표, 산업입지 관련 지표, 어메니티 관련 지표, 생활서비스변화 관련 지표, 관광산업 관련 지표)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개 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137개 시·군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² 권역별 비교를 위해서 4개 권역 각각 125명씩 조사함.

10 서론

위해 농촌 주민을 농가 여부, 가족 형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사례(20명)에 대하여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4.5. 전문가 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협의회, 농림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관련 정책 담당자, 그 밖에 양극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과정 및 결과 분석 등에 반영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4.6.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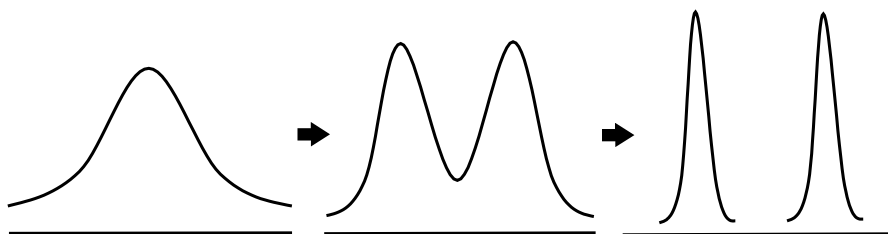
기존 자료 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농촌 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F검증, 기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례별 심층 면접조사 결과 및 관찰방법의 조사 결과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양극화의 개념 정의

양극화(bi-polarization)란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분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즉, 양극화는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극단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되고 집단 간 이질성 및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전병유 등 2006)<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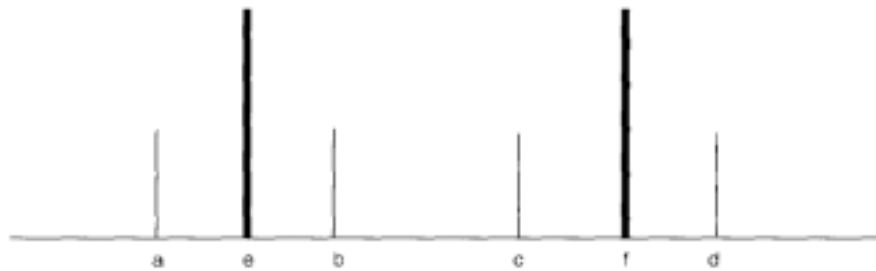
양극화는 지니계수나 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 지표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표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불평등 지표들은 전체 평균에 대한 각 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계층의 해체나 밀집 정도는 설명하지 못한다. 양극화가 곧 불평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그림 2-1. 분포의 양극화 과정



12 양극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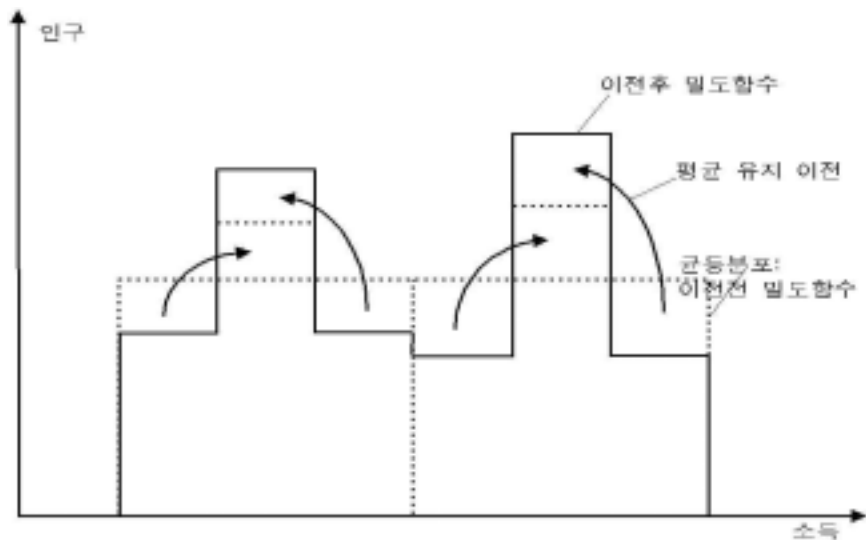
그림 2-2.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예시



주: 가로축은 소득수준을, 세로축은 각 집단에 대한 상대도수를 나타냄.

자료: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16 (1): 63~80.

그림 2-3. 소득 분배 불평등과 양극화



자료: Wolfson, Michael C., 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 401~421.

<그림 2-2> 및 <그림 2-3>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예시되어 있다. <그림 2-2>에서 a, b, c, d의 네 가지 소득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분포를 가정하자. a와 b 사이의 그리고 c와 d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시행하여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e와 f의 두 수준으로 이루

어진 소득분포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소득재분배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이후에는 소득분포가 보다 집락화되었으며 중산층은 사라지는 양극화가 발생한다. 즉, <그림 2-3>에서 쌍봉형 분포는 균등분포에서 출발해 평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지만 쌍봉형 분포는 균등분포보다 더 양극화된 분포이다.

양극화는 시간에 따른 분포의 변화라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며, 상·하계층간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양극화의 정도는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질 때 높아지기도 하지만 집단 간 격차가 불변이어도 각 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때도 높아진다.

2. 양극화의 지수화 방법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수화 방법으로는 ER(Esteban and Ray)지수와 Wolfson지수가 있다.

2.1. ER지수

ER(Esteban and Ray) 양극화지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변인의 분포가 2개의 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한 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인이 다른 집단에 느끼는 반감의 정도는 동질성함수와 이질성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 Ray 1994)는 서로 다른 분포간 양극화 지수값들을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직관적인 공리들(axioms)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 공리들에 따라 동질성 및 이질성 함수들은 구체적인 형

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³ 그러나 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 Ray 1994)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2개의 집단으로 이미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그리하여 최근에 에스테반 등(Esteban et al. 1999; Duclos et al. 2004)은 E에스테반과 레이(Esteban & Ray 1994)의 방법을 발전시켜 연속분포를 2개의 극점들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근사(approximation)에 의한 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R 양극화지수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인 소득 y 는 유한 폐구간 $[a, b]$ 에서 밀도함수 f 로 표시되고 y 는 평균(μ)이 1이 되도록 정규화 되었다고 하면, 이 밀도함수 f 는 (식 1)과 같은 2개의 극점들로 구성된 집합(ρ)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π_1 은 y_0 과 y_1 구간사이에 놓일 확률을 의미하며, μ_1 은 동일 구간 내에서의 조건부 평균값을 의미한다.

$$(식 1) \quad \rho = (y_0, y_1, y_2; \pi_1, \pi_2; \mu_1, \mu_2)$$

Esteban과 Ray(1994)의 제안에 따른 양극화지수⁴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식 2) \quad ER(\alpha, \rho) = \pi^\alpha + (1 - \pi)^\alpha - L(\pi)$$

연속밀도함수를 두 개의 극점들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완화하기 위해 에스테반 등(Esteban et al. 1999; Duclos et al. 2004)은 ER지수에 근사한 양극화의 과장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식 3)과 같은 개선된 양극화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epsilon(f, \rho)$ 는 근사에 의한 오차를, β 는 단순 ER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사오차에 두게 되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값이다.

³ Esteban and Ray(1994), pp.832-833을 참조.

⁴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극화 지수는 $ER(\alpha, \rho)^N = \sum_i \sum_j \pi_i^{\alpha} + \pi_j^{\alpha} |\mu_i - \mu_j|$ 로 정의된다.

$$(식\ 3) \quad P(f, \alpha, \beta) = ER(\alpha, \rho) - \beta \epsilon(f, \rho)$$

연속변수의 분포를 극값으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오차는 (식 4)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G(\cdot)$ 는 괄호 안의 분포에 해당하는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식\ 4) \quad \epsilon(f, \rho) = G(\pi) - (\pi - L(\pi))$$

따라서 개선된 ER양극화지수는 (식 5)와 같다.

$$(식\ 5) \quad P(f; \alpha, \beta, y) = (\pi^\alpha + (1 - \pi)^\alpha)(\pi - L(\pi)) - \beta[G - (\pi - L(\pi))]$$

2.2. Wolfson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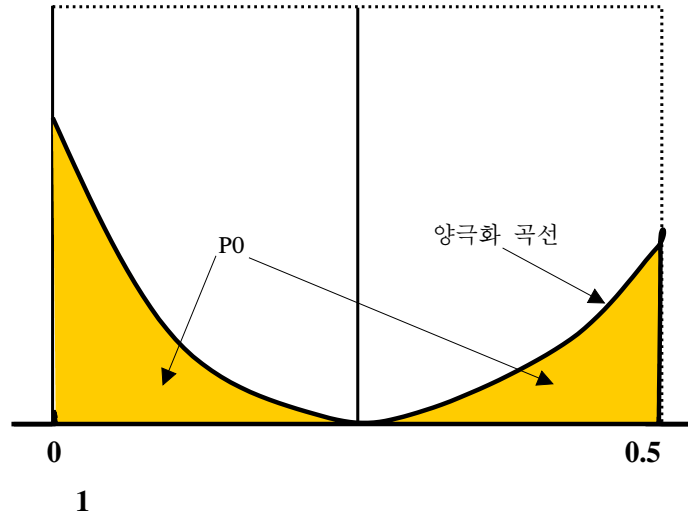
울프슨(Wolfson 1994)은 중위층의 소멸을 양극화와 동일시하고 특정 변인에 대한 중위(median)값을 기준으로 중위 값과 그 밖의 계층 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다.

울프슨 양극화지수는 일반적인 불평등 지수들처럼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도출된다. 하지만 누적밀도 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의 두 축을 전치(transpose)한 후, 일반적인 로렌츠 곡선과는 달리 수평축의 각 수준들을 평균값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위수로 나눈다. 그리고 수평축을 곡선의 가운데점까지 이동시킨다. 그 다음 50분위 수 이하 집단들에 해당하는 곡선부분(중위점의 왼쪽 부분)을 뒤집은 후, 중위수에서부터 양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그림 2-4>와 같은 양극화 곡선이 도출된다.

서로 다른 로렌츠 곡선이 불평등 정도의 비교에 있어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면적 개념을 활용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직접 비교하듯, 양극화 곡선 자체 역시 부분적인 순위(partial ordering) 정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양극화 곡선의 양극화 정도의 완전 비교(complete ordering)를 위해 양극화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한편, 울프슨은 양극화 곡선의 전환(Transformation of Polarization

그림 2-4. 양극화 곡선



Curve)을 통해 지니계수를 활용한 양극화지수 계산방식을 제안하였다. 만약 곡선에 ‘중위수/평균’을 곱하고, 수평축을 로렌츠 곡선의 접점(tangent)에까지 기울이면, 로렌츠 곡선과 동일한 전환된 양극화 곡선이 생성된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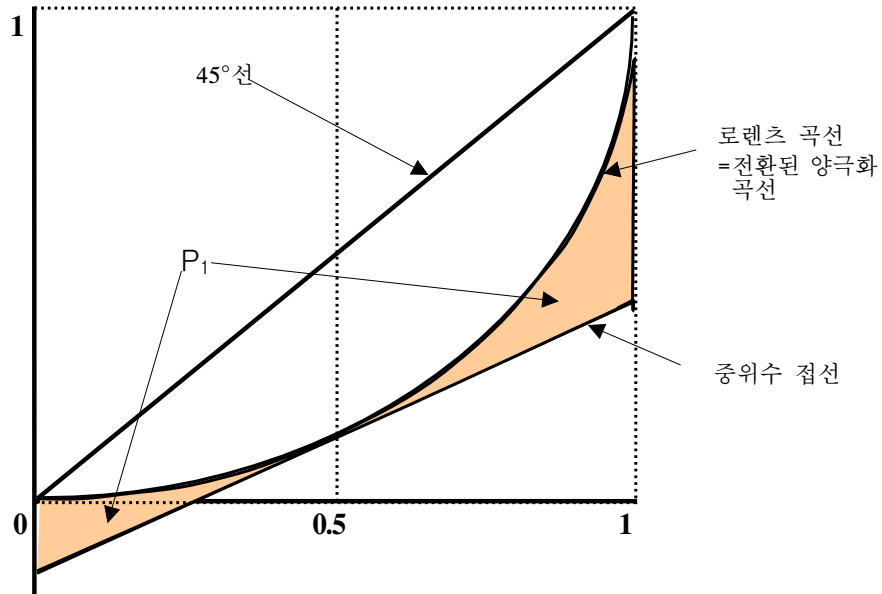
<그림 2-4>에서 양극화 곡선 아래 빗금 친 부분 P_0 는 <그림 2-5>의 빗금 친 부분으로 (식 6)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m 은 중위수, μ 은 평균, m/μ 은 로렌츠 곡선에 대한 접점의 기울기, G 는 지니계수, T 는 45° 선과 중위수 접선(median tangent)에 의해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면적이다.

$$(식 6) \quad P_0 = \frac{P_1}{m/\mu} = \frac{(T - G/2)}{m/\mu}$$

한편, 지니계수와의 비교를 위해 울프슨은 P_0 면적을 4배수한 (식7)과 같은 최종 공식을 만들어 냈다.⁵ 여기서 $L(0.5)$ 은 로렌츠 곡선의 50분위 값

⁵ 전체 집단이 완전하게 동등한 분포를 가질 경우 P_0 는 0, 인구의 절반이 0, 나머지가 2μ 를 가지는 완전 양극 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가지면 0.25의 값을 가진다. 즉 $0 < P_0 < 0.25$ 이다. 따라서 P_0 의 4배수를 통해 지니계수와 비교될 수 있는

그림 2-5. 로렌츠 곡선에서의 전환된 양극화 곡선



이다.

$$(식 7) \quad W = 4P_0 = \frac{\mu}{m} 2(2T - Gini) = \frac{\mu}{m} 2(2(0.5 - L(0.5)) -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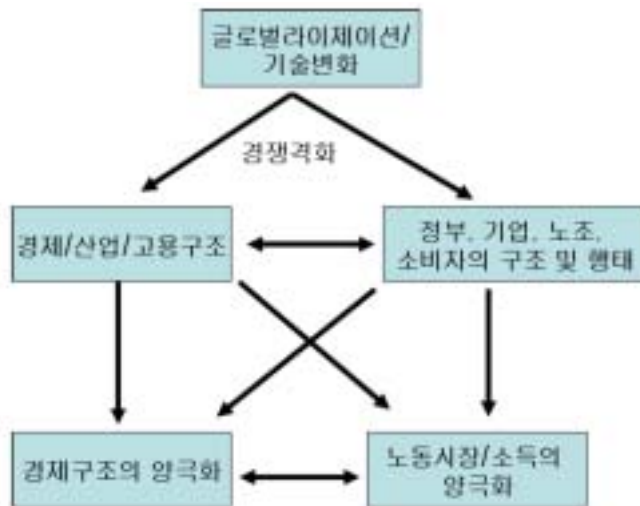
3. 양극화의 원인

3.1.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경제적 접근

윤진호(2006)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극화지수가 생산될 수 있다.

그림 2-6. 사회양극화의 원인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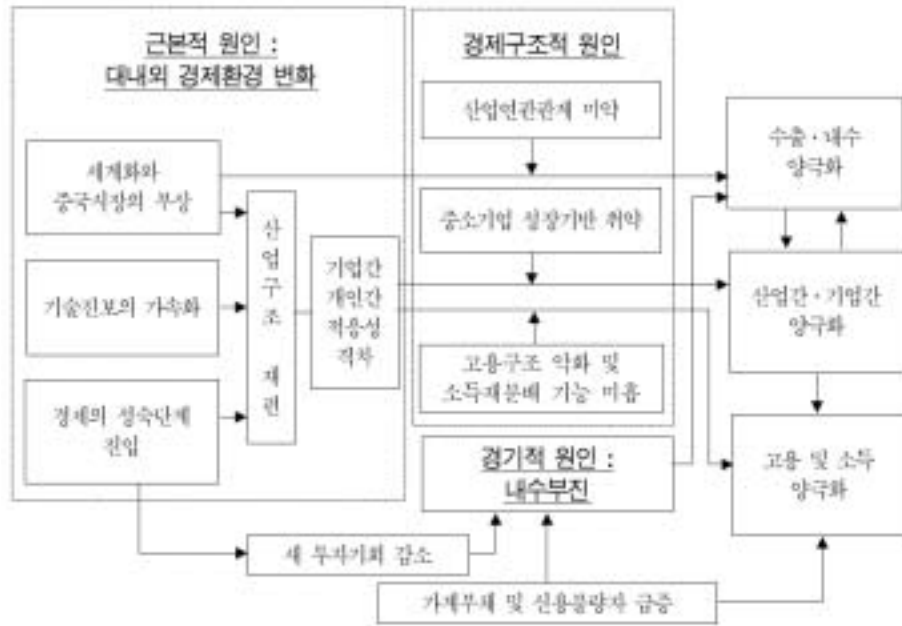
외부적 요인, 구조적 요인, 주체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보았다<그림 2-6>. 여기서 외부적 요인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른 경쟁 격화를 의미하고, 구조적 요인은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관관계가 취약하여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이중구조화를 의미하고, 주체적 요인은 정부의 시장·경쟁 지향적 경제정책, 기업의 단기 업적 중심 경영관리, 노동조합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구조 등을 의미한다.

열린정책연구원(2006)은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경기적 원인(내수 부진)을 강조하였다<그림 2-7>.

3.2. 양극화의 원인 관련 다차원적 접근(사회적 배제론)

양극화의 원인과 관련된 다차원적 접근으로는 ‘사회적 배제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Pierson 2001; Alvey 2000),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그림 2-7. 양극화의 원인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농촌사회 양극화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론’의 개념적·실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 사회양극화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층 혹은 빈곤층이 주어진 계층구조 내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현상으로서의 빈곤문제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개념적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적 배제론’은 그러한 전략 중 하나로서 의미를 가진다(Atkinson 1998; 국가인권위원회 2003). 즉 빈곤의 원인을 빈곤계층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찾음으로써 빈곤의 발생 및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즉 공공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사회적 배제론은 빈곤 및 빈곤화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서 의미도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총량적 자료(aggregate

data)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는 기존의 빈곤 연구는 빈곤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종종 빈곤의 형성·재생산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 중에는 빈곤 문제를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해 빈곤 현상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빈곤 문제에는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상이한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사회현실이다. 요컨대, 빈곤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정책적 개입을 더욱 다양화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론의 궁극적 목적이다. 즉 사회적 배제론에서는 빈곤 현상의 동태적 측면, 관계적 측면, 다차원성 등이 강조된다(강신욱 등 2005: 62~66)<표 2-1>.

기존의 빈곤연구는 사회적·문화적·공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빈곤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경제 결정론적 관점으로 기울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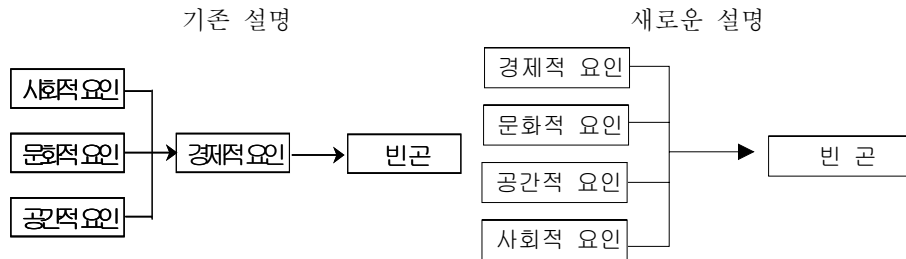
경제적 요인이 빈곤 현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이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림 2-8>은 빈곤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도식화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구

표 2-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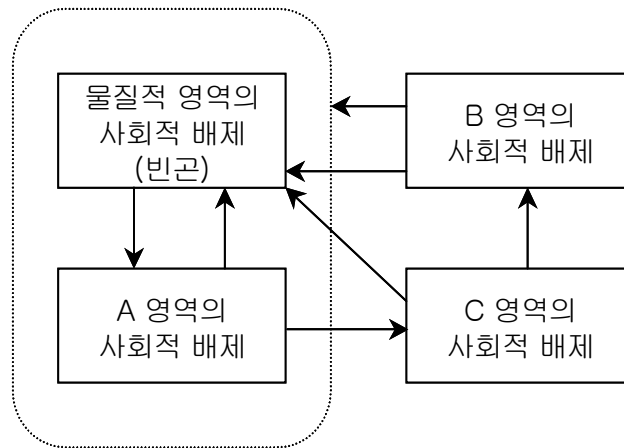
	정태적 결과	동태적 과정
소득 중심 접근	빈곤(poverty)	궁핍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 접근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그림 2-8. 빈곤에 대한 설명방식의 비교



성 요소, 즉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브레민크스와 버그만(Vleminckx & Berghman 2001)은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도가 실패할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① 시민참여(혹은 시민적 통합, civic integration)를 촉진해야 할 민주주의적·법적 제도의 실패, ② 직업 및 소득 활동(경제적 통합)을 촉진해야 할 노동시장의 실패, ③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할 국가복지제도의 실패, ④ 개인간 통합(inter-personal)을 촉진해야 할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실패 등으로 구분하였다. 베르만과 필립스(Berman & Phillips 2000)는 사회적 삶의 질을 네 가지 차원, 즉 사회경제적 안정과 불안정, 사회적 통합과 배제, 사회적 응집과 아노미, 임파워먼트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경제적 안정은 물질적 안전, 고용안전, 주거안전, 건강 유지 등으로, 사회적 통합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주택시장,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정치제도, 공동체 서비스 등으로의 통합, 사회적 응집과 임파워먼트 역시 정치·경제·사회·심리 등으로 세분된다. 피어슨(Pierson 2001)은 더욱 직접 사회적 배제의 구성 요소를 언급하면서 빈곤과 저소득, 노동시장 접근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 및 관계망의 결핍, 지역사회 혹은 근린 효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다차원적·동태적 빈곤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 배제 영역 간의 역동적 관계성에 대한 고찰에서 가능하다<그림 2-9>.

그림 2-9. 빈곤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제론의 설명방식(예시)



1. 실태 조사 개요

기존 통계자료(사회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의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론에 근거하여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부문별로 먼저 분석을 하고, 양극화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1.1.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분석에 사용된 「사회통계조사」는 1996~2005년 자료로서 양극화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이용한 항목은 소득부문은 ‘소득만족도’, 고용부문은 ‘취업상태’, ‘근무여건 만족도’, 교육부문은 ‘교육수준’, ‘전체교육비’, ‘사교육비’, ‘평생학습 참여’, 건강부문은 ‘건강평가’, 주거부문은 ‘주택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사회 참여부문은 ‘사회단체 참여’, ‘가정생활만족도’ 등이고, 양극화 전반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차지하는 비중(계층의식)’, ‘계층이동 가능성’ 등이었다. 한편 농가의 소득 양극화지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농가경제조사」 1998~2004년의 농가소득 자료였다. 양극화의 지수화 방법은 양극화 연구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ER지수(개선된 ER지수)를 사용하였다.

1.2.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전국 농촌(읍·면)지역의 20세 이상 성인으로 전체 표본의 수는 500명이었다. 표본추출은 농촌지역을 인구 증가율, 노인 인구 비율, 대도시와의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농촌을 4개 권역(관광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인접지역, 지역발전이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지대 농업 중심지역)으로 나누고 우선 각 권역별로 6개 조사지점을 선정한 후 각 지점별 20세 이상 연령층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을 실시하고, 각 지점별로 읍·면 및 통·반·리를 순차로 무작위 추출한 후, 최종 표본가구와 표본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다<표 3-1>. 조사 방법은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였고,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다. 조사된 응답자의 일반특성은 <표 3-2>와 같다.

2. 소득부문

소득부문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8년 및 2002년 소득만족도 조사, ‘농가경제조사’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농가소득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의 연간 총소득,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인식, 소득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소득 양극화 완화를

표 3-1. 지역별 표본 수 및 조사지점

지 역	인원(명)	조사지점
산간·해안지역	125	삼척, 완도, 정선, 제천, 철원, 홍천
도시 인접지역	125	광주(경기도), 기장, 남양주, 양산, 청원, 칠곡
중·산간 농업지역	125	강진, 고령, 보은, 영양, 울진, 진안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고창, 군산, 무안, 부여, 안동, 익산

표 3-2. 응답자의 일반 현황

구 분	범 주	빈 도	백분비(%)
성 별	남자	248	49.6
	여자	252	50.4
학 력	무학	45	9.0
	초등학교 졸업	113	22.6
	중학교 졸업	71	14.2
	고등학교 졸업	186	37.2
	전문대학 졸업	38	7.6
	대학교 졸업 이상	47	9.4
혼인상태	유배우자	369	73.8
	사별	48	9.6
	별거 또는 이혼	9	1.8
	미혼	74	14.8
가구형태	독신가구	50	10.0
	1세대가구(부부)	139	27.8
	2세대가구(부부+자녀)	229	45.8
	편부모+자녀	22	4.4
	3세대가구	46	9.2
	기타	14	2.8
연령	20대	82	16.4
	30대	82	16.4
	40대	93	18.6
	50대	78	15.6
	60대	136	27.2
	70대 이상	29	5.8
농촌거주기간	9년 이하	80	16.0
	10~19년	63	12.6
	20~29년	109	21.8
	30~39년	65	13.0
	40~49년	62	12.4
	50~59년	42	8.4
	60~69년	61	12.2
	70년 이상	18	3.6
직업	농림어업	139	27.8
	자영업	145	29.0
	사무·관리직	66	13.2
	생산직	28	5.6
	가정주부	59	11.8
	무직	35	7.0
	기타	28	5.6
계		500	100.0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2.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소득만족도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

표 3-3. 소득만족도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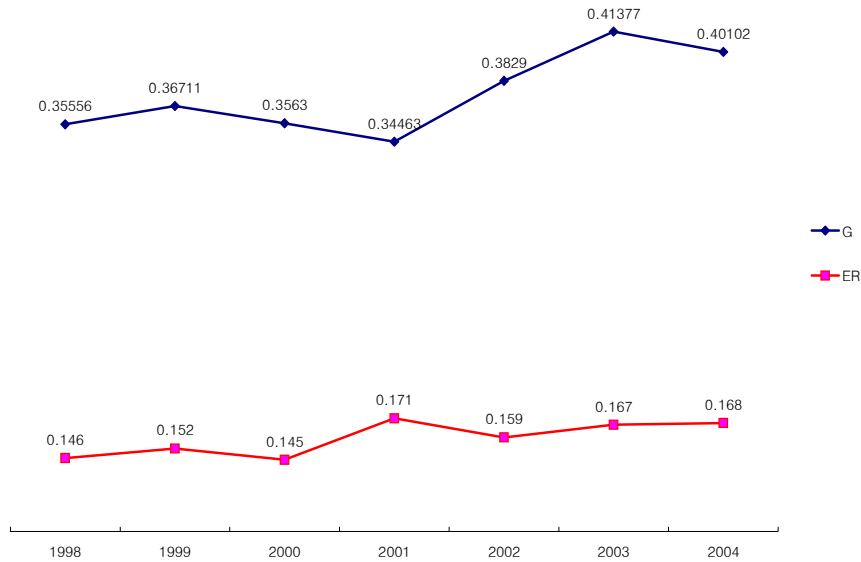
년도	지역	소득 만족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만족	
1998	도시	11.3	37.2	41.5	9.5	0.4	100.0
	농촌	10.2	37.0	42.2	10.2	0.3	100.0
	전체	11.0	37.2	41.7	9.7	0.4	100.0
2002	도시	13.8	35.1	39.3	10.6	1.3	100.0
	농촌	14.0	37.0	36.4	11.2	1.5	100.0
	전체	13.8	35.5	38.6	10.7	1.3	100.0

표 3-4.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지수 변화(1998~2004)

년도	표본수	π	$L(\pi)$	μ	μ_L	μ_H	G	$ER_{(\alpha=\beta=1)}$
1998	3,012	0.593	0.342	20,528,069	11,842,476	33,180,978	0.356	0.146
1999	3,026	0.601	0.341	21,942,063	12,454,267	36,220,884	0.367	0.153
2000	3,026	0.588	0.337	22,365,541	12,822,940	35,979,245	0.356	0.146
2001	3,039	0.588	0.330	23,364,404	13,115,372	37,993,015	0.345	0.171
2002	3,080	0.607	0.337	24,310,944	13,480,036	41,072,425	0.383	0.157
2003	3,037	0.619	0.329	27,436,832	14,564,491	48,382,227	0.414	0.166
2004	3,056	0.610	0.326	30,737,456	16,405,586	53,179,891	0.401	0.167

π : 평균값까지 농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μ_L : 평균이하집단 평균, μ_H : 평균이상집단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 Esteban-Ray 양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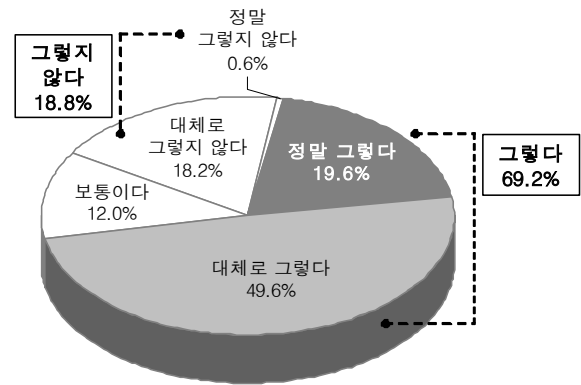
그림 3-1.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지수 변화(1998~2004)



과, 소득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1998년 10.2%에서 2002년 14.0%로 증가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1998년 42.2%에서 2002년 36.4%로 감소하였고,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1998년 0.3%에서 2002년 1.5%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도시도 농촌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3-3>.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1998년 0.356에서 2004년 0.401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양극화지수(ER)는 1998년 0.146에서 2004년 0.167로 증가하여 소득 양극화 또한 심화되었음을 보여 준다<표 3-4>. 그런데 2001년에는 소득 불평등도는 다소 낮아졌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그림 3-2.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2.2. 실태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의 연간 가구 총소득(근로소득+자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간 총소득은 2,086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가 27.0%, ‘3,001만원 이상’이 18.2%였다<표 3-5>. 권역별로는 ‘도시 인접지역’이 2,278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야 농업 중심지역’이 2,126만원, ‘중·산간 농업지역’ 2,067만원, ‘산간·해안지역’이

표 3-5. 연간 가구 총 소득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500만원 이하	46	9.2
501만~1,000만원	89	17.8
1,001만~2,000만원	164	32.8
2,001만~3,000만원	110	22.0
3,001만~5,000만원	77	15.4
5,001만원 이상	14	2.8
계	500	100.0

* 평균: 2,086만원

1,873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농촌 주민들의 연간 가구 총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69.2%,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8.8%로 나타났다<그림 3-2>. 권역별로 ‘그렇다’(‘그렇다’+‘정말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도시 인접지역(84.8%), 평야농업중심지역(69.6%), 중·산간 농업지역(62.4%), 산간·해안지역(60.0%) 순으로 높았다<표 3-6>.

표 3-6. 권역별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75(60.0)	106(84.8)	78(62.4)	87(69.6)	346(69.2)
보통이다	18(14.4)	9(7.2)	21(16.8)	12(9.6)	60(12.0)
그렇지 않다	32(25.6)	10(8.0)	26(20.8)	26(20.8)	94(18.8)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24.13, df = 6, p < .001$				

표 3-7.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도	백분비(%)
돈벌이 기회 부족	158	38.9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	63	15.5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47	11.6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44	10.8
교육 수준의 차이	38	9.4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한	35	8.6
도시 출신 귀농자의 증가	18	4.4
기타	3	0.7
계	406	100.0

* 비 해당자 94명은 제외함.

30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을 조사한 결과, ‘돈 벌이 기회 부족’이 38.9%,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이 15.5%,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가 11.6%, ‘미흡한 사회보장제도’가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7>. 모든 권역에서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돈벌이 기회부족’을 들었고, ‘산간·해안지역’ 및 ‘평야 농업 중심지역’에서는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을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소득양극화의 완화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가 3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이 26.1%,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은 19.0%, ‘중·소농 육성정책’이 15.3%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3-8>. 권역별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확대’는 ‘중·산간 농업지역’(37.4%), ‘평야 농업 중심지역’(36.4%), ‘산간·해안지역’(30.1%)에서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은 ‘도시 인접지역’(35.7%)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 양극화와 관련한 주민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구는 과수·채소·가축·특수작물 등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젊은 농가이거나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부동산이 많은 사람, 도시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귀농한 연금생활자 등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주로

표 3-8.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	123	3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106	26.1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	77	19.0
중농·소농 육성정책	62	15.3
경로연금의 확대	21	5.2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14	3.4
기타	3	0.7
계	406	100.0

* 비 해당자 94명은 제외함.

노령 독신가구인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특히 가난하고, 농촌마을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독신 여성노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부문

고용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5년 취업상태 조사통계와 1998년, 2002년의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고용 양극화에 대한 인식, 고용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3.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취업상태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촌과 도시 모두 임시직 및 일용직이 증가하였고 상용직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은 1997년 16.7%에서 2005년 21.3%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실업자는 0.8%에서 1.1%로 증가하였고, 도시의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은 1997년 30.0%에서 2005년 34.1%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실업자는 1.9%에서 2.5%로 증가하였다<표 3-9>.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1998년 0.099에서 2002년 0.114로 증가하고, 양극화지수(ER)는 1998년 0.039에서 2002년 0.044로 증가하였다<표 3-10>. 1998년에

3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서 근무여건 만족도의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약간 높았는데 2002년에는 역전이 되었다.

표 3-9. 취업상태의 변화(1997~2005)

단위: %

년도	지역	취업자							실업 자	비경제 활동자	계
		임금 근로자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1997	도시	38.2	20.8	9.2	8.2	17.0	6.6	58.7	1.9	39.4	100.0
	농촌	21.1	9.5	7.2	3.7	37.3	21.2	67.1	0.8	32.2	100.0
	전체	33.8	17.9	8.7	7.0	22.2	10.3	60.7	1.6	37.7	100.0
2001	도시	33.0	23.6	10.5	7.7	18.4	6.8	56.3	1.9	41.7	100.0
	농촌	19.1	10.1	9.0	3.2	38.4	20.1	66.3	1.0	32.7	100.0
	전체	29.5	20.2	10.1	6.6	23.4	10.2	58.6	1.7	39.7	100.0
2005	도시	36.1	23.6	10.5	7.7	17.0	5.1	58.7	2.5	38.8	100.0
	농촌	20.9	11.9	9.4	4.6	36.4	16.9	67.8	1.1	31.1	100.0
	전체	32.3	20.6	10.2	6.9	21.9	8.1	60.8	2.2	37.0	100.0

표 3-10. 근무여건 만족도의 변화(199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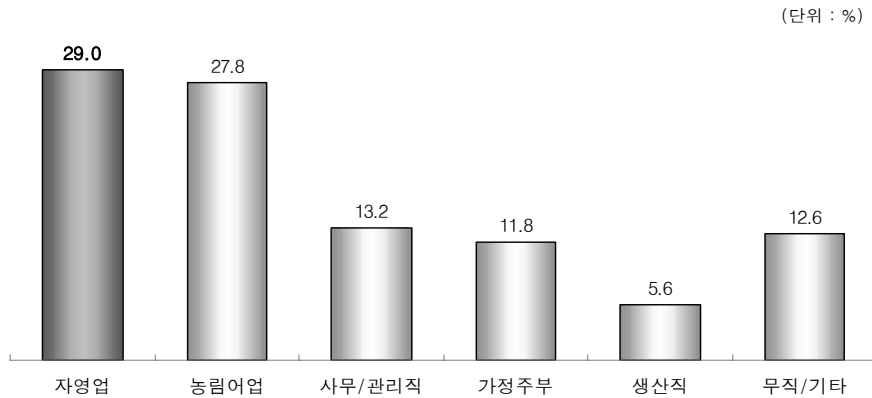
년도	지역	μ	π	$L(\pi)$	중위집단 비중			G	ER ($\alpha = \beta = 1$)
					80~120%	75~125%	66.7~133.3%		
1998	도시	26.777	0.512	0.440	73.1	83.3	91.2	0.103	0.041
	농촌	27.142	0.557	0.488	74.5	85.7	92.5	0.099	0.039
	전체	26.831	0.507	0.436	73.2	83.5	91.3	0.103	0.039
2002	도시	26.660	0.493	0.415	71.7	80.3	91.2	0.114	0.042
	농촌	26.412	0.511	0.432	71.8	78.2	88.7	0.114	0.044
	전체	26.621	0.496	0.418	71.6	80.3	91.4	0.114	0.042

* 9개 항목(하늘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직장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성희롱 방지노력,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총점(이론적 범위:9~45, 이론적 평균:27)

π : 평균값까지 놓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지니(Gini)계수, ER: Esteban-Ray양극화지수

그림 3-3. 현재 종사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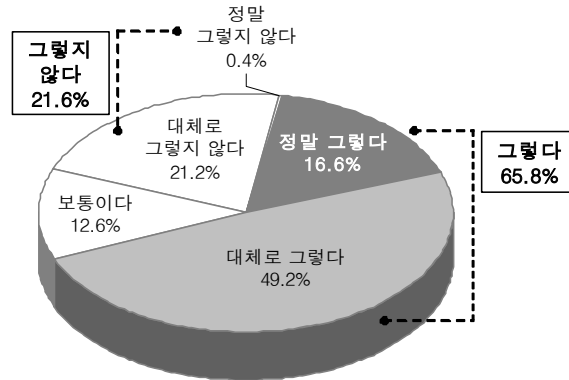
3.2. 실태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자영업’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어업’(27.8%), ‘사무/관리직’(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권역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자영업’은 ‘도시 인접 지역’(38.4%)에서 높고, ‘농림어업’은 ‘평야 농업 중심지역’(36.0%), ‘중·산간 농업지역’(31.2%), ‘산간·해안지역’(2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농촌사회가 취업이나 근로조건(작업환경)과 같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아주 좋은 계층(도시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사람, 공무원, 기계화된 대농 등)과 그렇지 못한 계층(농업 노동자, 영세 소농, 무직자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비율이 65.8%(‘정말 그렇다’ 16.6%, ‘대체로 그렇다’ 49.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양극화되어 있다’는 의견은 ‘도시인접지역’에서 8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간·해안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에서 각각 60.8%로 나타났다<표 3-11>.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주원인에 대해,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이 59.9%, ‘교육수준 차이’가 16.3% 등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3-4.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산간·해안지역: 72.4%, 중·산간 농업지역: 67.0%, 도시 인접지역: 51.4%, 평야 농업 중심지역: 50.0%)에서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12>.

고용 양극화의 완화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50.5%), ‘농한기 일자리 창출’(14.3%),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 및 차별 시정’(10.7%), ‘농외소득 기회 확대’(9.4%)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13>. 권역별로 보아도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 현상을

표 3-11. 권역별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765(60.8)	101(80.8)	76(60.8)	76(60.8)	329(65.8)
보통이다	22(17.6)	6(4.8)	15(12.0)	20(16.0)	63(12.6)
그렇지 않다	27(21.6)	18(14.4)	34(27.2)	29(23.2)	108(21.6)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20.36, df = 6, p < .01$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확대’라는 의견이 모든 권역(평야 농업 중심지역: 65.6%, 도시 인접지역: 50.5%, 산간·해안지역: 44.9%, 중·산간 농업지역: 40.7%)에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결과 농촌 주민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크고, 농한기 일자리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표 3-12.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	235	59.9
교육 수준 차이	64	16.3
취약 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이 부족함	27	6.9
비농업인 증가	19	4.8
취업정보 및 후원자 부족	17	4.3
건강상의 문제	14	3.6
교육 및 훈련기회 부족	14	3.6
기타	2	0.5
계	392	100.0

*비 해당자 108명은 제외함.

표 3-13.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완화를 취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	198	50.5
농한기 일자리 창출	56	14.3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 및 차별 시정	42	10.7
농외소득 기회 확대	37	9.4
고령친화 농업 장려	28	7.1
다양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19	4.8
취업정보 제공	11	2.8
기타	1	0.3
계	392	100.0

* 비 해당자 108명은 제외함.

4. 교육부문

교육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5년 교육 수준 조사, 1996년, 2000년, 2004년 교육비 조사 및 평생교육 참여 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교육 양극화(교육수준, 사교육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4.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 중 ‘사회통계조사’의 교육 수준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1997년 0.413에서 2005년

표 3-14. 교육 수준의 변화(1997~2005)

년도	지역	μ	π	$L(\pi)$	중위집단 비중			G	ER ($\alpha = \beta = 1$)
					80~ 120%	75~ 125%	66.7~ 133.3%		
1997	도시	5.582	0.603	0.431	44.9	44.9	57.8	0.265	0.080
	농촌	3.652	0.562	0.256	13.4	22.9	22.9	0.413	0.200
	전체	5.133	0.514	0.302	41.7	41.7	54.7	0.304	0.120
2001	도시	5.823	0.645	0.476	44.4	44.4	55.3	0.258	0.080
	농촌	3.877	0.559	0.248	11.9	20.4	20.4	0.410	0.213
	전체	5.390	0.546	0.351	41.7	41.7	52.8	0.296	0.093
2005	도시	6.190	0.717	0.544	42	42	51.9	0.253	0.093
	농촌	4.260	0.563	0.261	12.3	19.1	19.1	0.397	0.208
	전체	5.756	0.616	0.429	39.8	39.8	50.2	0.289	0.086

* 교육 수준: 0=무학, 1=초교재학/중퇴, 2=초졸, 3=중교재학/중퇴, 4=중졸, 5=고교재학/중퇴, 6=고졸, 7=전문대재학/중퇴, 8=전문대졸, 9= 대학재학/중퇴, 10= 대학졸, 11=대학원재학/중퇴, 12=대학원졸
 π : 평균값까지 놓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Esteban-Ray 양극화지수

0.397로 감소하고, 양극화지수(ER)는 1997년 0.200에서 2005년 0.208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도시도 비슷하였다<표 3-14>.

전체 교육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2000년에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는 1996년 0.499에서 2000년 0.519로 증가했다가 2004년 0.462로 다시 감소하였고, 양극화지수(ER)도 1996년 0.245에서 2000년 0.257로 증가했다가, 2004년 0.208로 다시 감소하였다. 도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이 도시보다 전체 교육비의 지니계수 및 양극화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사교육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1996년 0.567에서 2000년 0.667로 증가했다가, 2004년 0.588로 감소하였고, 양극화지수(ER)는 1996년 0.252에서 2000년 0.354로 증가했다가, 2004년 0.292로 감소하였다<표 3-16>. 농촌이 도시보다 사교육비 지니계수 및 양극화지수가 더 높았다.

한편,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등의 평생학습 참여 정도

표 3-15. 전체 교육비의 변화(1996~2004)

년도	지역	μ (만원)	π	$L(\pi)$	중위집단 비중			G	ER ($\alpha = \beta = 1$)
					80~ 120%	75~ 125%	66.7~ 133.3%		
1996	도시	209.1	0.654	0.335	19.0	24.6	32.1	0.439	0.199
	농촌	165.4	0.682	0.310	17.3	22.2	28.8	0.499	0.245
	전체	200.0	0.655	0.325	17.9	22.5	37.0	0.453	0.207
2000	도시	223.0	0.638	0.309	16.8	21.4	28.6	0.454	0.204
	농촌	209.9	0.671	0.283	14.9	18.6	24.5	0.519	0.257
	전체	220.5	0.643	0.303	16.0	20.5	27.1	0.466	0.214
2004	도시	584.4	0.621	0.320	19.9	25.2	33.0	0.422	0.180
	농촌	526.3	0.639	0.304	18.0	22.6	29.4	0.462	0.208
	전체	573.1	0.626	0.318	19.5	24.4	32.0	0.431	0.185

*전체교육비=학교납입금+과외비(사교육비)+하숙·자취비+기타

π : 평균값까지 농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Esteban-Ray 양극화지수

에 대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996년 11.8%에서 2004년 17.5%로 증가하였다<표 3-17>. 같은 기간 도시도 평생학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996년 15.5%에서 2004년 22.0%로 증가하였다.

표 3-16. 사교육비의 변화(1996~2004)

년도	지역	μ (만원)	π	$L(\pi)$	중위집단 비중			G	ER ($\alpha = \beta = 1$)
					80~ 120%	75~ 125%	66.7~ 133.3%		
1996	도시	870.4	0.618	0.252	15.7	20.1	25.4	0.511	0.219
	농촌	449.0	0.610	0.200	13.9	16.5	19.6	0.567	0.252
	전체	782.2	0.630	0.248	15.4	19.9	25.0	0.532	0.231
2000	도시	784.9	0.637	0.177	7.9	13.8	15.3	0.616	0.303
	농촌	457.3	0.648	0.136	4.3	6.7	7.2	0.669	0.354
	전체	721.6	0.652	0.180	6.9	13.0	13.9	0.630	0.313
2004	도시	2,783.2	0.606	0.195	9.9	15.0	17.9	0.558	0.264
	농촌	1,820.1	0.618	0.178	9.4	12.7	15.1	0.588	0.292
	전체	2,596.1	0.615	0.197	11.0	12.9	15.2	0.568	0.269

π : 평균값까지 농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 Esteban-Ray 양극화지수

표 3-17. 평생학습 참여의 변화(1996~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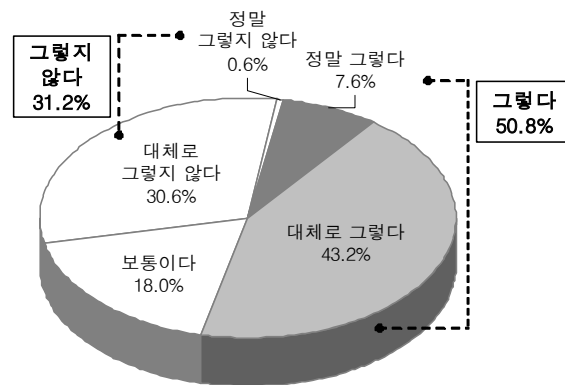
단위: %

년도	지역	평생학습 유무								전체
		있음(중복응답)						소계	없음	
		직장 연수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직업 훈련	TV/ 라디오	기타			
1996	도시	8.4	3.3	3.1	1.3	3.7	0.3	15.4	84.5	100.0
	농촌	4.2	1.0	2.0	4.9	1.5	0.2	11.8	88.2	100.0
	전체	7.4	2.8	2.8	2.1	3.2	0.3	14.6	85.3	100.0
2000	도시	6.4	3.1	2.7	0.9	3.1	0.3	18.3	81.7	100.0
	농촌	3.7	1.1	1.9	4.2	1.7	0.3	13.7	86.3	100.0
	전체	5.8	2.6	2.5	1.6	2.8	0.3	17.2	82.8	100.0
2004	도시	7.6	2.7	3.4	1.1	3.2	0.2	22.0	78.0	100.0
	농촌	5.2	1.3	3.0	3.9	2.0	0.2	17.5	82.5	100.0
	전체	7.0	2.4	3.3	1.7	2.9	0.2	20.9	79.1	100.0

4.2. 실태 조사 결과

농촌사회 학력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0.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1.2%로 나타났다<그림 3-5>.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평야 농업 중심지역 45.6%, 산간·해안지역 43.2%, 중·산간 농업지역 42.4%로 나타났다<표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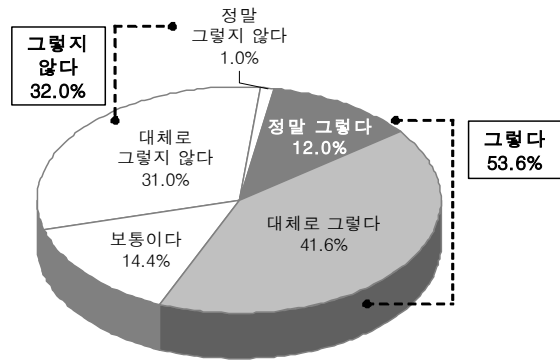
그림 3-5. 농촌사회 교육 수준(학력)의 양극화 인식 정도



3-18. 권역별 농촌사회 교육 수준(학력)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교육 수준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54(43.2)	90(72.0)	53(42.4)	57(45.6)	254(50.8)
보통이다	37(29.6)	4(3.2)	28(22.4)	21(16.8)	90(18.0)
그렇지않다	34(27.2)	31(24.8)	44(35.2)	47(37.6)	156(31.2)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45.45, df = 6, p < .001$				

그림 3-6. 농촌사회 사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한편 농촌사회의 사교육기회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3.6%,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2.0%로 나타났다<그림 3-6>.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산간·해안지역 53.6%, 중·산간 농업지역 45.6%, 평야 농업 중심지역 43.2%로 나타났다<표 3-19>.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55.0%), ‘사교육기관의 부족’(22.1%), ‘학부모의 관심정도의 차이’(15.0%) 등을 지적하고 있었으며<표 3-20>, ‘농촌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라는 의견이 모든 권역(평야 농업 중심지역: 63.0%, 중·산간 농업지역:

표 3-19. 권역별 농촌사회 사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사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67(53.6)	90(72.0)	57(45.6)	54(43.2)	268(53.6)
보통이다	32(25.6)	8(6.4)	13(10.4)	19(15.2)	72(14.4)
그렇지않다	26(20.8)	27(21.6)	55(44.0)	52(41.6)	160(32.0)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48.15, df = 6, p < .001$				

60.0%, 산간·해안지역: 52.5%, 도시 인접지역: 48.0%)에서 높았다.

그 완화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33.2%), ‘방과 후 교육 확충’(27.6%)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표 3-21>. 사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교육비 지원 확대’는 ‘도시 인접지역’(37.6%), ‘산간·해안지역’(29.9%), ‘중·산간 농업지역’(26.5%)에서 높고, ‘평야 농업 중심지역’(31.0%)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아동 센터확충’은 ‘산간·해안지역’(27.3%),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는 ‘중·산간 농업지역’(21.4%), ‘도시 인접지역’(2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20.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187	55.0
사교육기관의 부족	75	22.1
학부모의 관심정도의 차이	51	15.0
방과 후 교육 부족	22	6.5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	5	1.4
계	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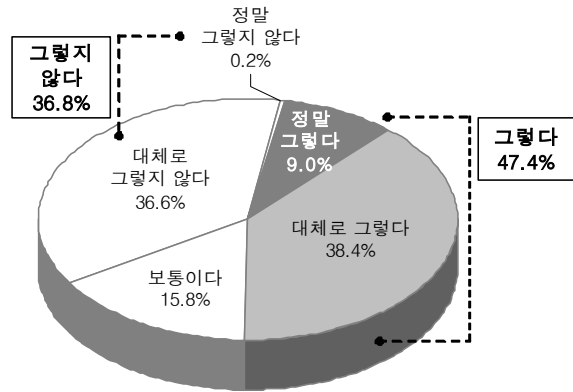
* 비 해당자 160명은 제외함.

표 3-21.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	113	33.2
방과 후 교육 확대	94	27.6
지역아동센터 확충	66	19.4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56	16.5
교통수단 또는 교통비 지원	7	2.1
사이버교육의 확대	4	1.2
계	340	100.0

* 비 해당자 160명은 제외함.

그림 3-7.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한편 농촌사회의 사회교육기회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7.4%,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6.8%로 나타났다<그림 3-7>.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64.0%), 산간·해안지역(56.0%), 평야 농업 중심지역(36.0%), 중·산간 농업지역(3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2>.

농촌사회 사회교육기회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농촌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38.0%), ‘관련 정보의 부족’(19.6%)등을 지적하고 있었다<표 3-23>. 권역별로는 ‘농촌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가 ‘도시 인접지역’(52.

표 3-22. 권역별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70(56.0)	80(64.0)	42(33.6)	45(36.0)	237(47.4)
보통이다	27(21.6)	13(10.4)	26(20.8)	13(10.4)	79(15.8)
그렇지않다	28(22.4)	32(25.6)	57(45.6)	67(53.6)	184(36.8)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50.44, df = 6, p < .001$				

7%), ‘평야 농업 중심지역’(36.2%), ‘산간·해안지역’(35.1%)에서 높고, ‘관련정보 부족’은 ‘중·산간 농업지역’(29.4%)에서 높았다.

농촌사회 사회교육기회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회교육비 지원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교육정보 확대’(20.6%),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15.5%) 등

표 3-23.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120	38.0
관련 정보의 부족	62	19.6
눈높이에 알맞은 교육의 부족	48	15.2
노인 인구의 증가	38	12.0
교통수단의 부족	22	7.0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22	7.0
학력 부족	4	1.3
계	316	100.0

* 비 해당자 184명은 제외함.

표 3-24.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사회교육비 지원 확대	95	30.1
적극적인 교육정보 확대	65	20.6
눈높이에 알맞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49	15.5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 확충	33	10.4
노인 및 저학력자를 위한 성인교육 상담	32	10.1
접근성 개선	30	9.5
교육 참여시 대체인력 제공	11	3.5
기타	1	0.3
계	316	100.0

* 비 해당자 184명은 제외함.

44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그림 3-8. I군의 W초등학교



그림 3-9. I군의 W초등학교 S분교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4>. 권역별로는 ‘사회교육비 지원 확대’가 ‘도시 인접지역’(37.6%), ‘산간·해안지역’(29.9%), ‘중·산간 농업지역’(26.5%)에서 높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평야 농업 중심지역’(31.0%)에서 높았다.

한편, 교육 양극화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조사 결과 여성노인은 학력이 가장 낮으며, 문맹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촌학교일수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교재의 개발보다는 복식수업 방식에 대한 교사교육이 더욱 시급하며, 조·손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농촌학교의 경우 학생 모둠 형성과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려워 농촌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과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의 초등학교 간에도 본교와 분교는 외형적인 학교시설에서부터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5. 건강부문

건강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9년, 2003년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건강수준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강수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5.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 중에 사회통계조사의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건강하지 못함’은 1999년 3.8%에서 2003년 5.6%로 증가하였고, ‘매우 건강함’은 1999년 5.8%에서 2003년 7.1%로 증가하였다<표

3-25>. 반면에 도시는 ‘건강하지 못함’은 1999년 18.5%에서 2003년 16.7%로 감소하였다.

5.2. 실태 조사 결과

‘귀택에서는 지난해(2005년) 몸이 많이 아팠지만 병원, 의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4명(10.8%)으로 나타

표 3-25. 주관적 건강평가의 변화(1999~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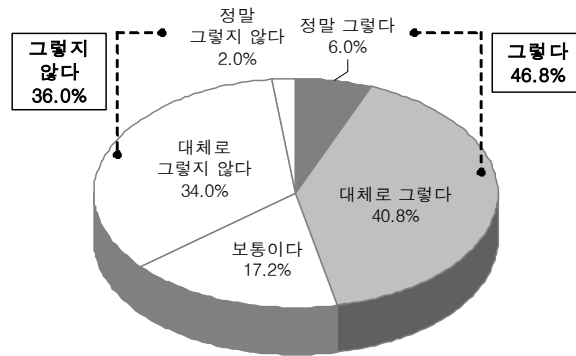
단위: %

년도	지역	매우 건강하지 못함	건강하지 못한 편	보통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함	전체
1999	도시	2.6	15.9	38.9	36.4	6.2	100.0
	농촌	3.8	22.3	32.1	36.0	5.8	100.0
	전체	2.9	17.4	37.3	36.3	6.1	100.0
2003	도시	2.5	14.2	40.9	35.3	7.1	100.0
	농촌	5.6	22.1	32.8	32.4	7.1	100.0
	전체	3.2	16.0	39.1	34.6	7.1	100.0

표 3-26. 권역별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50(40.0)	84(67.2)	48(38.4)	52(41.6)	234(46.8)
보통이다	38(30.4)	12(9.6)	15(12.0)	21(16.8)	86(17.2)
그렇지않다	37(29.6)	29(23.2)	62(49.6)	52(41.6)	180(36.0)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48.42, df = 6, p < .001$				

그림 3-10.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났다. 의료기관 방문이나 치료를 포기한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에’(48.1%),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중단할 수 없어서’(27.8%) 등이었다. 권역별로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산간·해안지역’에서 1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시 인접지역’(12.8%), ‘중산간 농업지역’(10.4%), ‘평야 농업 중심지역’(5.6%)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6.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6.0%로 나타났다<그림 3-10>.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67.2%), 평야 농

표 3-27. 농촌사회 건강수준 양극화의 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164	51.3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	46	14.4
부실한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	35	10.9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부족	23	7.2
열악한 주거여건	19	5.9
직업의 차이	18	5.6
건강 관련 정보 및 관심 부족	15	4.7
계	320	100.0

* 비 해당자 180명은 제외함.

업 중심지역(41.6%), 산간·해안지역(40.0%), 중·산간 농업지역(38.4%) 순으로 나타났다<표 3-26>.

농촌사회 건강수준 양극화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51.3%),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14.4%), ‘부실한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10.9%)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3-27>. 권역별로는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가 모든 권역(도시 인접지역: 58.3%, 평야 농업 중심지역: 57.5%, 산간·해안지역: 50.0%, 중·산간 농업지역: 34.6%)에서 높았다. 한편,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 ‘부실한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중·산간 농업지역에서 각각 2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 확대’ 35.6%,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확대’ 28.8%,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확대’ 15.6% 등을 꼽았다<표 3-28>. 권역별로는 ‘중·산간 농업지역’(49.2%), ‘평야 농업 중심지역’(41.1%), ‘산간·해안지역’(36.4%)은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지원 확대’가 높고, ‘도시 인접지역’(49.0%)은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확대’가 높았다.

한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야간 및 주말은

표 3-28.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 확대	114	35.6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확대	92	28.8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확대	50	15.6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고	29	9.0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 강화	12	3.8
취약지역에 대한 질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16	5.0
보건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7	2.2
계	320	100.0

* 비 해당자 180명은 제외함.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어 문제가 많고,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 취약 계층은 순회 진료나 교통편 제공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인력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종합건강검진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치료와 직접 연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주거부문

주거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4년 주택만족도 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주거 양극화에 대한 인식, 주거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주거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6.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 중 ‘사회통계조사’의 주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불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은 1997년 35.6%에서 2004년 31.0%로 감소하였고, ‘만족’(약간 만족 및 매우 만족)은 1997년 29.9%에서 2004년 39.2%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9>.

거주지역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불만’은 1997년 2.7%에서 2004년 5.4%로 증가하고, ‘보통’은 1997년 41.3%에서 2004년 39.8%로 감소하고, ‘매우 만족’은 1997년 12.2%에서 2000년 16.5%로 증가했다가, 2004년 9.7%로 다시 감소하였다<표 3-30>. 거주지역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주택만족도의 변화(1997~20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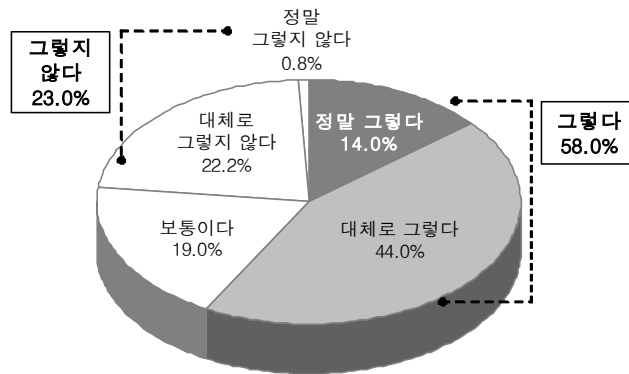
년도	지역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1997	도시	7.2	34.2	37.5	15.4	5.7	100.0
	농촌	6.6	29.0	34.5	19.0	10.9	100.0
	전체	7.0	32.9	36.8	16.3	7.0	100.0
2001	도시	8.0	27.4	39.2	17.7	7.7	100.0
	농촌	7.4	21.2	34.1	22.1	15.2	100.0
	전체	7.9	25.9	38.0	18.8	9.5	100.0
2004	도시	8.1	28.9	33.8	20.0	9.2	100.0
	농촌	7.8	23.2	29.8	22.7	16.5	100.0
	전체	8.1	27.5	32.8	20.7	10.9	100.0

표 3-30. 거주지역 만족도의 변화(1997~2004)

단위: %

년도	지역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1997	도시	3.7	25.9	42.8	19.6	7.9	100.0
	농촌	2.7	19.3	41.3	24.5	12.2	100.0
	전체	3.5	24.3	42.5	20.8	8.9	100.0
2001	도시	4.5	22.7	42.8	20.7	9.4	100.0
	농촌	3.2	16.6	37.4	26.3	16.5	100.0
	전체	4.2	21.3	41.5	22.0	11.0	100.0
2004	도시	5.4	21.2	39.8	23.9	9.7	100.0
	농촌	5.4	16.3	36.9	26.0	15.4	100.0
	전체	5.4	20.0	39.1	24.4	11.1	100.0

그림 3-11. 농촌사회 주거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6.2. 실태 조사 결과

농촌사회 주거수준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8.0%,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3.0%로 나타났다<그림 3-11>.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88.0%, 평야 농업 중심지역 50.4%, 중·산간 농업지역 48.0%, 산간·해안지역 45.6%로 나타났다<표 3-31>.

표 3-31. 권역별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57(45.6)	110(88.0)	60(48.0)	63(50.4)	290(58.0)
보통이다	37(29.6)	8(6.4)	30(24.0)	20(16.0)	95(19.0)
그렇지 않다	31(24.8)	7(5.6)	35(28.0)	42(33.6)	115(23.0)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70.28, df = 6, p < .001$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의 주원인에 대해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68.1%, ‘노후주택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13.2%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표 3-32>. 권역별로도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가 모든 권역(도시 인접지역: 73.7%, 산간·해안지역: 71.3%, 평야 농업 중심지역: 67.5%, 중·산간 농업지역: 57.8%)에서 높았다.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34.0%),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26.0%),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16.6%), ‘공공 임대주택사업 확대’(10.6%)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표 3-32.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262	68.1
노후주택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51	13.2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	35	9.1
낮은 자산 가치로 인한 주택 개보수 의지 약화	32	8.3
직업의 차이	5	1.3
계	385	100.0

* 비 해당자 115명은 제외함.

표 3-33.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	131	34.0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100	26.0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	64	16.6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41	10.6
전세자금 또는 월임대료 지원	28	7.3
주택 개·보수 표준모델 개발·보급	19	4.9
기타	2	0.5
계	385	100.0

* 비 해당자 115명은 제외함.

그림 3-12.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택(H군 사례)



그림 3-13.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주민의 주택(H군 사례)



고 있었다<표 3-33>. 권역별로도 ‘주택 개보수 자금지원’이 모든 권역(중·산간 농업지역: 41.1%, 산간·해안지역: 36.2%, 평야 농업 중심지역: 30.1%, 도시 인접지역: 29.7%)에서 높았다.

한편, 주민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 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경우일수록 주택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독거노인의 주택은 대체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 그리고 농촌마을에서 아주 좋은 집은 주로 외지인의 주말 별장이거나 도시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농촌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난방을 기름보일러 대신에 화목이나 연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3>. 그리고 경로당은 겨울철의 공동난방으로 인해서 개별 가구의 난방비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주택 구조를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개조하기를 바라는 노인이 많았다.

7. 사회참여부문

사회 참여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9년, 2003년 종교 활동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참여, 민원서비스 이용조사, 1998년, 2002년 가정생활만족도 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사회 참여 양극화에 대한 인식, 사회 참여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사회 참여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7.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교 활동은 ‘있음’이 1999년 50.0%에서

2003년 54.3%로 증가했고, 사회단체활동 참여경험은 ‘있음’이 1999년 20.4%에서 2003년 46.0%로 증가했으며, 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은 ‘있음’이 1999년 15.0%에서 2003년 17.7%로 증가하였고, 민원서비스 이용경험은 ‘있음’이 1999년 75.8%에서 2003년 54.1%로 감소하였다<표 3-34>. 도시도 농촌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통계조사’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

표 3-34. 사회 참여 정도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종교활동 유무									계
		있음								없음	
		주2회 이상	주1회 정도	월 1~2회	연 5~6회	연 3~4회	연 1~2회	불참	소계		
1999	도시	15.20	20.80	12.00	8.20	7.00	18.40	18.20	54.00	46.00	100.0
	농촌	14.30	13.80	8.40	8.20	12.90	25.40	16.90	50.00	50.00	100.0
	전체	15.00	19.30	11.30	8.20	8.30	19.90	18.00	53.10	46.90	100.0
2003	도시	14.70	20.90	12.30	8.00	7.40	18.30	18.50	55.00	45.00	100.0
	농촌	15.10	16.40	9.00	9.20	12.50	21.20	16.70	54.30	45.70	100.0
	전체	14.80	19.90	11.50	8.20	8.50	19.00	18.10	54.80	45.20	100.0

표 3-34. 사회 참여 정도의 변화(계속)

년도	지역	사회단체활동 참여경험			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			민원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있음	없음	계
1999	도시	23.5	76.5	100.0	12.9	87.1	100.0	83.9	16.1	100.0
	농촌	20.4	79.6	100.0	15.0	85.0	100.0	75.8	24.2	100.0
	전체	22.8	77.2	100.0	13.4	86.6	100.0	82.0	18.0	100.0
2003	도시	46.2	53.8	100.0	14.6	85.4	100.0	51.6	48.4	100.0
	농촌	46.0	54.0	100.0	17.7	82.3	100.0	54.1	45.9	100.0
	전체	46.1	53.9	100.0	15.3	84.7	100.0	52.1	47.9	100.0

표 3-35. 가정생활 만족도의 변화(1998~2002)

년도	지역	μ	π	$L(\pi)$	중위집단 비중			G	ER ($\alpha = \beta = 1$)
					80~ 120%	75~ 125%	66.7~ 133.3%		
1998	도시	18.621	0.515	0.434	67.2	77.0	90.1	0.109	0.053
	농촌	18.730	0.495	0.421	63.2	80.8	98.2	0.102	0.046
	계	18.642	0.511	0.432	67.9	77.5	90.2	0.108	0.050
2002	도시	19.245	0.531	0.444	52.3	71.7	97.9	0.114	0.060
	농촌	19.326	0.529	0.446	55.7	72.6	98.2	0.112	0.054
	계	19.260	0.530	0.445	52.9	71.8	97.9	0.114	0.056

*5개 항목(부모관계, 배우자부모관계, 자녀관계, 배우자관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만족도 총점(이론적 범위: 5-25, 이론적 평균:15)

π : 평균값까지 놓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 Esteban-Ray양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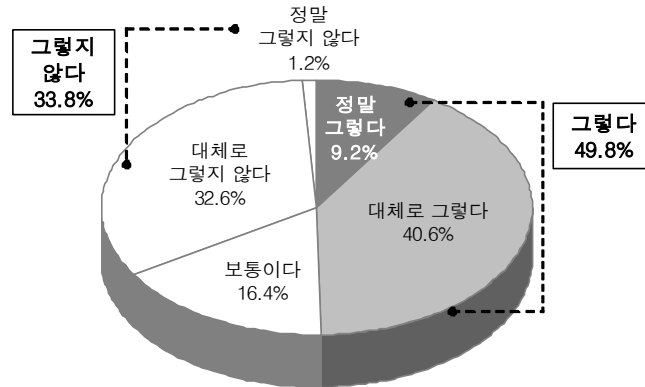
은 감소하였고, 지니계수는 1998년 0.102에서 2002년 0.112로 증가했으며, 양극화지수(ER)는 1998년 0.046에서 2002년 0.054로 증가하였다<표 3-35>. 도시도 농촌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7.2. 실태 조사 결과

농촌사회 사회 참여(친목활동, 사회단체 참여, 이웃·친척과의 교류 등) 수준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9.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3.8%로 나타났다<그림 3-14>.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산간·해안지역 52.0%, 중·산간 농업지역 44.8%, 평야 농업 중심지역 30.4%였다<표 3-36>.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소득격차’(58.9%), ‘주거나 지리적 여건의 차이’(17.8%) 등을 지적하였다<표 3-37>. 권역별로는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이 모든 권역(도시 인접지역: 75.5%, 산간·해안지역: 54.0%, 평야 농업 중심지역: 51.7%, 중·산간 농업지역: 48.8%)에서 높았다.

그림 3-14. 농촌사회 사회 참여 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45.3%),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20.8%),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 확대’ 14.2%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표 3-38>. 권역별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모든 권역(산간·해안지역: 51.7%, 도시 인접지역: 48.0%, 중·산간 농업지역: 41.7%, 평야 농업 중심지역: 36.2%)에서 높았다.

표 3-36. 권역별 농촌사회 사회 참여 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사회참여 수준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65(52.0)	90(72.0)	56(44.8)	38(30.4)	249(49.8)
보통이다	22(17.6)	12(9.6)	28(22.4)	20(16.0)	82(16.4)
그렇지 않다	38(30.4)	23(18.4)	41(32.8)	67(53.6)	169(33.8)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52.69, df = 6, p < .001$				

한편, 심층 면접조사결과, 마을 또는 지역의 지도계층일수록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또는 마을공동체가 복지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정보부족으로 사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력이 낮은 계층은 사회 참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사회 참여 관련 행사를 농한기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7.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주원인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소득 격차	195	58.9
주거나 지리적 여건의 차이	59	17.8
교육 수준의 차이	27	8.2
직업의 차이	22	6.6
가족 문제	10	3.0
건강 문제	9	2.7
개인 성격상의 문제	9	2.7
계	331	100.0

* 비 해당자 169명은 제외함.

표 3-38.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응답 범주	빈 도	백분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150	45.3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	69	20.8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 확대	47	14.2
지역자치센터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개선	27	8.2
사회 활동 참여시 대체인력 지원	22	6.6
지역 교통여건 개선	16	4.8
계	331	100.0

* 비 해당자 169명은 제외함.

8. 양극화 전반

양극화 전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회통계조사’의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 가능성(1999년, 2003년)에 대한 조사통계를 분석하였다.

8.1. 기존 통계자료 분석 결과

자신이 속한 계층을 중간층(중상·중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999년 56.2%에서 2003년 49.7%로 감소한 반면, ‘상상’은 1999년 0.2%에서 2003년 0.4%로 증가하였고, ‘하하’는 1999년 14.2%에서 2003년 21.2%로 증가하였다<표 3-39>. 도시도 농촌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1999년 6.8%에서 2003년 8.9%로 증가했고, ‘보통이다’는 1999년 44.8%에서 2003년 31.7%로 감소했으며, ‘매우 높다’는 1999년 3.7%에서 2003년 2.5%로 감소하였다<표 3-40>. 또한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있어서는 ‘낮다’는 1999년 11.2%에서 2003년 22.0%로 증가했고, ‘보통이다’는 1999년 40.0%에서 2003년

표 3-39. 계층의식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계층의식						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1999	도시	0.2	0.9	17.7	40.1	26.9	14.3	100.0
	농촌	0.2	0.9	18.5	37.7	28.5	14.2	100.0
	전체	0.2	0.9	17.8	39.5	27.2	14.3	100.0
2003	도시	0.3	1.1	18.4	37.6	25.3	17.4	100.0
	농촌	0.4	0.7	16.6	33.1	28.1	21.2	100.0
	전체	0.3	1.0	18.0	36.5	26.0	18.3	100.0

19.3%로 감소했으며, ‘높다’(매우 높다+비교적 높다)는 1999년 48.9%에서 2003년 58.6%로 증가하였다<표 3-41>. 이러한 경향은 도시도 유사하였다.

표 3-40. 계층이동 가능성(세대내)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					계
		매우 낮다	비교적 낮다	보통이다	비교적 높다	매우 높다	
1999	도시	7.2	22.1	47.2	20.8	2.7	100.0
	농촌	6.8	19.3	44.8	25.4	3.7	100.0
	전체	7.1	21.5	46.7	21.8	2.9	100.0
2003	도시	8.5	24.2	30.8	34.1	2.4	100.0
	농촌	8.9	21.1	31.7	35.7	2.5	100.0
	전체	8.6	23.5	31.0	34.5	2.4	100.0

표 3-41. 계층이동 가능성(세대간)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					계
		매우 낮다	비교적 낮다	보통이다	비교적 높다	매우 높다	
1999	도시	2.6	10.0	41.3	40.4	5.8	100.0
	농촌	2.3	8.9	40.0	41.5	7.4	100.0
	전체	2.5	9.7	41.0	40.6	6.1	100.0
2003	도시	6.8	17.4	21.8	47.8	6.1	100.0
	농촌	5.7	16.3	19.3	51.3	7.3	100.0
	전체	6.6	17.1	21.2	48.6	6.4	100.0

8.2. 실태 조사 결과

농촌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9.6%,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그림 3-15>.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83.2%, 산간·해안지역 57.6%, 평야 농업 중심지역 52.8%, 중·산간 농업지역 44.8%로 나타났다<표 3-42>.

그림 3-15. 농촌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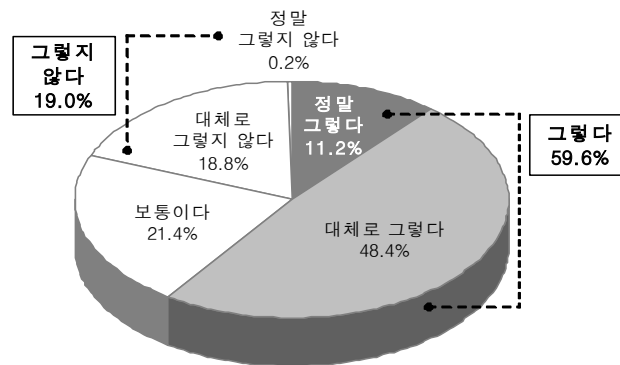


표 3-42. 권역별 농촌사회 전반적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전반적 양극화 인식 정도	권역				
	산간·해안 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농업 중심지역	계
그렇다	72(57.6)	104(83.2)	56(44.8)	66(52.8)	298(59.6)
보통이다	32(25.6)	13(10.4)	36(28.8)	26(20.8)	107(21.4)
그렇지 않다	21(16.8)	8(6.48)	33(26.4)	33(26.4)	95(19.0)
계	125(100.0)	125(100.0)	125(100.0)	125(100.0)	500(100.0)
통계	$\chi^2 = 46.62, df = 6, p < .001$				

9. 종합

소득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소득만족도)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전체 2/3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소득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 주민 간의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농가 간 소득 양극화도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돈벌이 기회 부족이고,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실정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취업상태, 근무여건 만족도)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고용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전체 2/3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고용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사회 고용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역시 일자리 부족이고,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교육수준, 교육비, 평생학습 참여도)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교육 양극화는 1990년대 말까지 심화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전체 1/2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교육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육 양극화는 객관적인 현실과 농촌 주민들의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사회 교육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주민 간의 소득격차이고,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교육 확충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사회교육비 지원과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주관적 건강평가)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건강수준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건강수준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사회 건강수준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때문이고, 건강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주택만족도, 거주지역만족도)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주거수준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농촌 주민들이 주거수준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때문이고, 주거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 개·보수 자금지원,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교, 사회단체, 자원봉사 등에 대한 참여는 점차 늘고 있지만, 민원서비스 이용은 점차 줄고 있고, 가정생활만족도는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거의 1/2에 해당하는 농촌 주민들이 사회 참여수준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 사회 참여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소득 격차 때문이고, 사회 참여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연결망 구축,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전반과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계층의식 변화, 계층이동 가능성) 분석 결과 농촌사회의 계층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거의 60%의 농촌 주민들이 농촌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극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부문 간에 비교한 결과 소득(69.2%) 부문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였고 그다음 고용(65.8%), 주거(58.0%), 사교육(53.6%), 학력(50.8%), 사회 참여(49.8%), 사회교육(47.4%), 건강(46.8%) 순으로 나타났다<표 3-43>.

부문별 양극화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하면 ‘소득 양극화’의 평균 점수는 3.69점, ‘고용 양극화’의 평균점수는 3.60점, ‘교육 양극화’의 평균 점수는 3.26점, ‘건강 양극화’의 평균점수는 3.15점, ‘주거 양극화’의 평균 점수는 3.48점, ‘참여 양극화’의 평균점수는 3.24점으로 나타났다.⁶ 권역별

로는 ‘도시 인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극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부문 이외의 모든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표 3-44>.

6개 부문의 양극화 인식 총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양극화 인식 종합점수를 권역별로 비교한 결과, ‘도시 인접지역’이 67.44점으로 가장 높고, ‘산간·해안지역’ 61.54점, ‘중·산간 농업지역’ 56.24점, ‘평야 농업 중심지역’ 55.27점으로 나타났다(F값은 13.92이고, 유의수준은 .000임).

양극화 부문 간의 상호 연관 정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보면, 전반적인 양극화와 양극화의 각 부문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고르게 나타났다<표 3-45>.

요컨대, 기존 통계자료(사회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분석,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화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부문은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부문은 최근에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양극화 인식 정도의 부문간의 비교

단위: %

범 주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학력 수준	사교육	사회 교육			
양극화된	69.2	65.8	50.8	53.6	47.4	46.8	58.0	49.8
양극화되지 않음	18.8	21.6	31.2	32.0	36.8	36.0	23.0	33.8

⁶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 인식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여 6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였음. 단 교육부문은 학력, 사교육, 사회교육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 3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했음.

표 3-44. 양극화 인식 점수의 권역별 비교

양극화 부문	권역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수준
소 득	산간·해안지역	125	3.63	1.19	2.09	.100
	도시 인접지역	125	3.89	0.71		
	중·산간 농업지역	125	3.62	1.04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3.63	1.00		
	계	500	3.69	1.00		
고 용	산간·해안지역	125	3.72	1.14	3.03	.029
	도시 인접지역	125	3.75	0.81		
	중·산간 농업지역	125	3.43	0.99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3.51	1.04		
	계	500	3.60	1.01		
교 육	산간·해안지역	125	3.44	0.91	11.69	.000
	도시 인접지역	125	3.52	0.81		
	중·산간 농업지역	125	3.05	0.77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3.03	0.86		
	계	500	3.26	0.87		
건 강	산간·해안지역	125	3.21	1.03	9.01	.000
	도시 인접지역	125	3.49	0.90		
	중·산간 농업지역	125	2.86	1.05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3.04	1.00		
	계	500	3.15	1.02		
주 거	산간·해안지역	125	3.43	1.14	11.70	.000
	도시 인접지역	125	3.92	0.62		
	중·산간 농업지역	125	3.30	0.99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3.27	1.09		
	계	500	3.48	1.01		
참 여	산간·해안지역	125	3.34	1.11	15.14	.000
	도시 인접지역	125	3.62	0.88		
	중·산간 농업지역	125	3.23	1.06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2.78	0.96		
	계	500	3.24	1.05		
양극화 종 합 점 수	산간·해안지역	125	61.54	19.69	13.92	.000
	도시 인접지역	125	67.44	14.08		
	중·산간 농업지역	125	56.24	15.93		
	평야 농업중심지역	125	55.27	16.98		
	계	500	60.13	17.43		

표 3-45. 양극화 부문간의 상관관계수

부 문	전반적인 양극화	소득	고용	교 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학력 수준	사교육	사회 교육			
소득	0.426	1							
고용	0.410	0.376	1						
교육	학력수준	0.448	0.381	0.452	1				
	사교육	0.494	0.398	0.493	0.604	1			
	사회교육	0.429	0.374	0.432	0.444	0.599	1		
건강	0.471	0.267	0.367	0.453	0.533	0.430	1		
주거	0.489	0.296	0.375	0.375	0.392	0.336	0.426	1	
사회참여	0.489	0.338	0.320	0.338	0.378	0.403	0.369	0.343	1

* 모든 상관관계수가 $p < 0.01$

1.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현황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우리나라 정책은 노동부의 노동정책,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노동정책으로는 ①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②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③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④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②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책 마련, ④ 근로시간의 단축 및 최저임금 보장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회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②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의 추진, ③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산·발전, ④ 지역밀착형 고용정책의 기반 강화, 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① 취약 계층에 특

화된 능력개발의 지원·강화, ② 지역 및 산업 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③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① 보험 및 복지서비스의 확충, ② 산재·고용보험체계의 혁신, ③ 퇴직연금제의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사회복지정책으로는 ①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③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④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⑤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 전략 수립,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치매·중풍대책 추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한방 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교통사고 및 농작업사고·재해 등으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이나 고령으로 독자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농업인에게 정부가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교육정책으로는 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③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 ④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수립, 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이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1998년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지역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에 시작하였다.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은 2003년에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확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수립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에 수립되었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집중 육성을 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여,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시설 현대화 지원, 교장 초빙제도의 우선적 실시 등을 추진하며,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 학교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2004년 10월에 발표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사업으로는 ①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용하는 학교안팎 대안교육 활성화, ②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으로 사회적응 및 자활능력 개발, ③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장기입원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의 설치·확대, ④ 다문화가정(새터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등이 있다.

1.2.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의 문제점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현행 정책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쟁력 담론’에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방화, 시장기능의 신장과 효율성의 추구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적극 편승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무대책’ 내지 ‘소극적 대책’), 사회정책부처와 정책자문그룹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통합 담론’에서는 지나친 경쟁력 추구가 가져오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에 대처하여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사회안전망의 강화,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적극적 대책’).

둘째,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확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신빈곤의 효율적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기반이 취약하다.

셋째, 사회재정이 취약하고 경제·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조세·공적 이전에 의한 시장소득 불평등 감소 기여도도 낮다(2000년 4.5%).

넷째,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질적인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저임금의 단기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전략으로는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누적적인 양극화 또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크게 부족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농업 및 농촌부문에 특화된 정책이 별로 없다.

2.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2.1. 스웨덴

스웨덴의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제도, 의료 서비스와 주거 및 근로에 대한 지원, 취약인구집단별 지원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접근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하던 시스템에서, 근로를 유인하는 시스템 쪽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보험, 부모보험, 노령연금,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16세 이상의 거주민은 국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제도는 과거에 일을 했든 안 했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지급하고 있고, 사회부조는 사회보험과 수당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통해 가구 유형별 급여를 지급한다.

의료 관련 사회보장은 주로 질병 발생 시 소득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로 취급한다. 의료기술 및 관련 서비스는 일반세수에 의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장받으며,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휴가나 일시퇴직을 해야만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전해준다.

주거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수당, 사회부조 수급가구에 대한 주택부조, 연금생활자를 위한 주거보조를 한다.

교육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의무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학생 수당과 교육부조를 지급한다. 근로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국가와 노조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도 구직활동과 재훈련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지급하도록 바꾸고 있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금권이 없거나 연금액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자산조사를 통해 일부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본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2.2. 프랑스

프랑스의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지원정책으로는 사회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 적극적 고용 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종사상의 지위 혹은 직업 및 직종에 따라 독립적으로 복수제도가 운영된다.

질병보험에는 질병보험수당, 모성수당, 질병수당, 산업재해·직업병수당, 생명보험수당 등이 있다. 질병보험수당은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대상이며 현금수당은 총 임금의 50%이고, 모성수당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 동안 지급되며,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 전후 각각 8주, 18주까지 증가하고, 질병수당은 최소 66.6% 이상의 장애가 생긴 피보험자의 수입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며, 산업재해·직업병 수당은 출퇴근 시 사고를 포함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생명보험수당은 질병수당 수급 자격자가 사망했을 때 부양가족이 수령한다.

노령보험에는 노령연금과 최저노령수당이 있다.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이며 4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않았거나 저소득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수당으로 최저 노령수당제도를 운영한다.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수당이 지급되며,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실업보험 혜택자격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직장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업부조가 주어진다.

사회부조는 최저생활상태의 개인 혹은 가구를 상대로 하는 프랑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부조와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부조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생활보장제도

(RMI)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1989년에 도입되었다. 사회적 미니멈은 최저생활수준의 소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로, 자활수당, 미망인수당, 장애보충수당, 편부모수당, 특별연대수당, 성인장애수당, 노령보충수당, 최저생활보장급여 등이 있다.

적극적 고용 창출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연대계약, 고용강화계약 등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 고용접근경로, 재취업계획 프로그램 등의 고용상담 프로그램, 전문직업훈련기관, 통합 고용훈련 수습, 기업연계 수습, 자격증취득계약, 적응계약 프로그램 등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2.3. 미국

미국은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근로활동’ 참여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을 통한 수급탈피를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산조사형 현금급여의 선정 기준은 매우 엄격한데 반해서 주거급여나 보육지원 등 현물급여는 수급기준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생계지원제도인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의 급여대상은 생활이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및 생활수준이 열악한 일반 장애인이다. 임산부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서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및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가족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T)가 지원된다.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GA)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S)나 빈곤가족 일시부조(TANT)의 수급자격에는 못 미치나 생활이 궁핍한 가구나 개인에 대해 현물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지원 제도로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을 위

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부조(Medicaid)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강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19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아동건강보험(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주거지원으로는 총소득이 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이며 수급자격은 거주지역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조금(Housing Choice Voucher) 등이 있다.

교육지원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중등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연방정부의 학생대부(Student Loans), 보조금(Grants), 장학금(Scholarship), Work-Study 등이 있다.

보육지원으로는 빈곤선 이하 가구의 5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가 있다.

고용지원으로는 사업주나 사업자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용 창출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고용보조금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근거로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있다.

2.4. 정책적 시사점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의 다양한 구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다. 또한, 개별가구의 욕구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급여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액이 세분화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일반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범주화된 부가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특성에 따른 생계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부가급여 수준도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 유형별 특수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부가급여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기능분담 등을 통해 공공부조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자활계획의 이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근로활동’ 참여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을 통한 수급탈피를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의 토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복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복지 수급자의 근로의욕 유지,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의존도 저감, 적극적 자활지원 등을 통한 근로유인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1. 일반적 정책방향

첫째, 소득이나 고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극화의 정도는 각 부문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의 권역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부문별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산간·해안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인접지역’은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권역보다 일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극화의 주된 원인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후 지원을 통한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문제소지 완화 노력도 중요하다. 사전 예방적 노력이 사후 지원보다 효율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빈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 유형별 특수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부가급여와의 관계 설정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공공부조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회 확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관련 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실천계획이 필요하고,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양극화 부문별 정책과제

2.1. 소득부문

첫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촌 주민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혹은 일시적인 사유로 가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거나 납부기간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가입기간 인정(Credit)’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직접 제공 또는 연계·지원하는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는 ‘도시 인접지역’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농촌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자활사업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의 국가발전 기여분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시장개방의 피해 보전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

환으로 일정 기간(예를 들면,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소농 육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과 차별화하여 중·소농의 경우 친환경 고품질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육성해야 한다.

2.2. 고용부문

첫째, 고령친화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인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 맞는 작목, 농법 등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농외소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취약 계층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농한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보육부문, 간호·간병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는 농촌사회 고용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고 4개 권역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여 근로연계 소득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3. 교육부문

첫째, 농촌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방과 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농촌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생의 소질·적성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강사를 확보하고, 악기 등 교재·교구 및 강사료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농촌 마을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면 단위 시설(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대학, 지역 여성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학습도우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군 구성·운영,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복식학급 편성기준 강화 및 분교장 제도 개선, 자율학교 운영 활성화 등의 소규모 학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교양교육, 직업교육)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교육비 및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교육에 대한 농촌 성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 외에 사이버(통신)교육의 확대,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교육 참여시 대체인력(농가도우미) 제공, 교통수단 지원 및 순회교육 확대 등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최근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4. 건강부문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개편하고, 농촌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하후상박) 경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 및 간호도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한약재 처방의 급여대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행정 기능을 강화하며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중보건간호사의 배치를 확대하고,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1차 의료장비, 공중보건의의 숙소 개·보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해야 한다.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의 확충’은 ‘도시 인접지역’ 이외의 농촌지역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촌 주민들(특히 교통 취약 계층)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순회버스를 운행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5. 주거부문

첫째, 농촌지역 개발계획과 주거복지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농촌형 임대주택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빈집 활용 및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여 무주택 노인, 귀농(촌)자 등에게 저렴하

게 임대하고,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매입·철거하여 마을 공동생활공간(주차장, 마을광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주택정비 자금(신축, 보수) 융자금리 및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셋째,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복지)회관과 연계한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독거노인 등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6. 사회참여부문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공무원, 종교단체,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과의 체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의 보건·복지·교육·여가·고용 등의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군 단위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및 읍면 단위 전담팀을 운영하고, 특히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농촌 주민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기존의 현지 농촌 주민과 새로이 농촌으로 유입된 도시귀농자,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며느리 등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1. 요약

1.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부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1.2. 양극화 관련 이론

양극화란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하고, 이를 지수화하는 방식에는 ER지수, Wolfson지수 등이 있다.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는 여러 관점 중에 사회적 배제론은 기존 연구들 중에는 빈곤 문제를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는 한계

를 넘어서 빈곤 현상의 동태적 측면, 관계적 측면, 다차원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1.3.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

이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구명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사회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분석 및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부문별로는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의 부문은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 부문은 최근에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 결과 농촌 주민 중 소득은 69.2%, 고용은 65.8%, 주거는 58.0%, 사교육 기회는 53.6%, 학력은 50.8%, 사회 참여는 49.8%, 사회교육 기회는 47.4%, 건강수준은 46.8%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소득·고용 양극화는 일자리 부족, 교육·건강·주거·사회참여 양극화는 경제능력이나 소득 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 주민은 소득·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교육 확충’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사회교육비 지원’과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 개·보수 자금지원’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 사회 참여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연결망 구축’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극화 6개 부문은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전반적인 양극화와 각 부문간에도 0.4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었다(소득

0.426, 고용 0.410, 학력 0.448, 사교육 0.494, 사회교육 0.429, 건강 0.471, 주거 0.489, 사회참여 0.489).

지역 유형별(산간·해안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로 주민의 양극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양극화 인식 총 점수는 ‘도시 인접지역’이 67.44점으로 가장 높고, ‘산간·해안지역’ 61.54점, ‘중·산간 농업지역’ 56.24점, ‘평야 농업 중심 지역’ 55.27점으로 나타났다.

1.4.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을 보면 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이 많고, ②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이 미흡하고, ③ 사회재정이 취약하고 경제·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고, ④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질적인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농업·농촌에 특화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의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①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의 다양한 구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었다. ② 최근 선진국의 복지개혁은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수준의 삭감, 급여에 따른 의무이행의 부여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자활계획의 이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③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근로활동’ 참여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을 통한 수급탈피를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1.5. 농촌사회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농촌사회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① 소득이나 고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② 농촌의 권역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③ 사후 지원을 통한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문제소지를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④ 빈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각 부문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부문에서는 ①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②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④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 ⑤ 중·소농 육성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용부문에서는 ① 고령친화 농업 장려, ② 농외소득 기회 확대, ③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문에서는 ① 농촌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급식비 지원 확대, ② 방과 후 교육 확대, ③ 농촌 마을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확충, ④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⑤ 농촌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교양교육, 직업교육) 강화, ⑥ 사회교육에 대한 농촌 성인들의 접근성 제고, ⑦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건강부문에서는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②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충, ③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주거부문에서는 ① 농촌지역 개발계획과 주거복지계획 연계, ② 주택자금 지원 확대, ③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마을(복지)회관과 연계한 소규모 공동 주거시설 마련 등이 필요하다.

사회 참여부문에서는 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② 소외

계층 대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③ 주민 참여행사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결 론

농촌사회는 대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양극화 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부문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부문은 최근에 상당히 완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양극화 부문 상호 간에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리고 농촌지역 별로 양극화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도시 인접지역’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산간·해안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보다 심하였다. ‘도시 인접지역’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더 높고, 도시로의 빈번한 왕래 등으로 인해서 양극화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고 농촌 권역을 감안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 및 고용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사회 참여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측면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인식수준뿐만 아니라 정책 요구사항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양극화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 록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접원 ○○○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에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자 성명		전 화 번 호	() -
가구주 성명			
응답자주소	(시) 면(읍) 리(동) 마을		
면접조사원		면 접 일 시	2006년 월 일

1. 응답자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문1-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문1-2. 귀하의 나이(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문1-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중퇴자 및 재학 중인 경우는 하위학교 졸업자에 포함)

- ① 무학 ② 초등(국민)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문1-4. 귀하께서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신 지는 총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 ()년

문1-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유배우자 ② 사별 ③ 별거 또는 이혼
④ 미혼 ⑤ 기타()

문1-6. 귀댁의 가구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귀댁에서 1개월 이상 숙식을 같이 하며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독신 가구 ② 1세대 가구(부부)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④ 편부모 + 자녀
⑤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⑥ 조부모 + 손자/손녀
⑦ 기타()

문1-7. 귀하의 가구원(가족) 중 함께 살고 계신 분(동거인)은 몇 명이고, 학교, 직장, 군대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분(비동거인)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거인	명	비동거인	명
-----	---	------	---

2. 소득 관련 사항

문2-1. 귀댁의 지난해(2005년)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득이 있었던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계 금액을 소득원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자가 소득 관련 사항을 잘 모를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것)

소득원*(참고사항 확인)		금액(만원)	
근로소득	농업소득	연간	만원
	농업 이외 근로소득	연간	만원
자산소득	금융소득	연간	만원
	부동산소득	연간	만원
	개인연금, 퇴직금 등 기타 자산소득	연간	만원
공적 이전소득		연간	만원
사적 이전소득		연간	만원
합 계		연간	만원

○ 참고사항

- 농업소득: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함.
- 농업 이외 근로소득: 비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함.
-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
- 공적 이전소득: 국가를 통한 소득으로 공적 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수당, 기타 정부보조금을 합한 것임.
- 사적 이전소득: 가족이나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말함.

문2-2. 귀댁의 가구소득 특성은 무엇입니까?(문2-1의 내용을 보고 면접원이 체크할 것)

- ① 농업소득뿐이다(전업농가)
- ② 농업소득이 농업 이외 소득보다 더 많다(농업소득 > 농업이외 소득)
- ③ 농업 이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더 많다(농업소득 < 농업이외 소득)
- ④ 농업 이외 소득뿐이다(비농가)

문2-3. 귀댁의 월 평균 생활비(식비, 전기요금,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만원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문2-4. 현재 귀하의 경제상태는 5년 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거의 그대로이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문2-5. 현재와 비교하여 5년 후에는 귀댁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문2-6.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득계층과 아주 가난한 소득계층으로 양극화되어(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2-6-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3으로 이동)

문2-6-1. <문항 2-6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 소득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②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
- ③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④ 도시 출신 귀농자의 증가
- ⑤ 교육 수준(학력)의 차이 ⑥ 돈벌이(취업 포함) 기회 부족
- ⑦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한
- ⑧ 기타(무엇:)

문2-6-2. <문항 2-6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소농 육성정책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 ③ 농촌형 특별소득보조제도의 도입
- ④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 ⑤ 경로연금의 확대
- ⑥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
- ⑦ 기타(무엇:)

3. 고용 관련 사항

문3-1. 귀하께서 현재 주로 종사하고 계시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② 자영업(서비스업 등) ③ 사무·관리직
 ④ 생산직(현장노동 등) ⑤ 가정주부 ⑥ 무직
 ⑦ 기타(무엇:)

문3-2.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취업이나 근로조건(작업환경)과 같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아주 좋은 계층(도시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사람, 공무원, 기계화된 대농 등)과 그렇지 못한 계층(농업 노동자, 영세 소농, 무직자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3-2-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4-1으로 이동)

문3-2-1. <문항 3-2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
 ② 교육 수준(학력)의 차이
 ③ 비농업인의 증가
 ④ 건강상의 문제
 ⑤ 교육 및 훈련 기회의 부족
 ⑥ 취약 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이 부족함
 ⑦ 취업정보 및 후원자 부족
 ⑧ 기타(무엇:)

문3-2-2. <문항 3-2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확대
 ② 농한기 일자리 창출
 ③ 고령친화 농업 장려
 ④ 농외소득 기회 확대
 ⑤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 및 차별 시정
 ⑥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⑦ 취업정보 제공
 ⑧ 기타(무엇:)

4. 교육 관련 사항

문4-1.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교육 수준(학력)이 아주 높은 계층과 아주 낮은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문4-2.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자녀의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 기회를 아주 많이 가지는 계층과 거의 가지지 못하는 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4-2-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4-3으로 이동)

문4-2-1. <문항 4-2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② 사교육기관의 부족
③ 학부모의 관심 정도의 차이 ④ 대중교통수단의 부족
⑤ 방과 후 교육 부족 ⑥ 기타(무엇:)

문4-2-2. <문항 4-2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사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② 방과 후 교육 확대
③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확충 ④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지원
⑤ 교통수단 또는 교통비 지원 ⑥ 사이버(통신)교육의 확대
⑦ 기타(무엇:)

문4-3.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성인 대상의 사회교육(운전·컴퓨터·한글·취미교육, 직업훈련 등) 기회를 아주 많이 가지는 계층과 거의 가지지 못하는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4-3-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5-1으로 이동)

①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 확대 ② 관련 정보의 부족
③ 교통수단의 부족 ④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⑤ 눈높이에 알맞은 교육의 부족 ⑥ 노인 인구의 증가
⑦ 학력(학습능력) 부족 ⑧ 기타(무엇:)

- ① 사회교육비 지원 확대
- ② 적극적인 교육정보 제공
- ③ 접근성 개선(교통수단 지원, 순회교육 확대 등)
- ④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 ⑤ 교육 참여 시 대체인력(농가도우미) 제공
- ⑥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 ⑦ 노인 및 저학력자를 위한 성인교육 상담
- ⑧ 사이버(통신)교육의 확대
- ⑨ 기타(무엇:)

① 있다 ② 없다 (→ 문항 5-2로 이동)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96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문5-2. 지난해(2005년) 귀택에서 지출한 보건의료비(병원비, 약값, 건강보조식품비 등)는 월 평균 얼마였습니까? 월 평균()만원

문5-3. 귀택의 전체 가계비 지출에서 보건의료비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① 부담이 전혀 안 된다 ② 부담이 거의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약간 된다 ⑤ 부담이 매우 크다

문5-4.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건강수준(건강정도)이 아주 높은 계층과 아주 낮은 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5-4-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6-1으로 이동)

문5-4-1. <문항 5-4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건강 수준이 양극화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 ② 부실한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 ③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
- ④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부족
- ⑤ 직업(근로조건)의 차이
- ⑥ 건강 관련 정보 및 관심 부족
- ⑦ 열악한 주거여건
- ⑧ 기타(무엇:)

문5-4-2. <문항 5-4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건강수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확대
- ②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 강화
- ③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지원 확대
- ④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고
- ⑤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확대
- ⑥ 보건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 ⑦ 취약지역에 대한 질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 ⑧ 기타(무엇:)

-(주)현대리서치연구소-

6. 주거 관련 사항

문6-1. 지난겨울(2005년 11월~2006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귀택의 주거용 난방비(석유·연탄값 등)는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만원

문6-2. 최근 3년 동안 귀택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수리·보수하는데 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 ()만원

문6-3. 귀택의 전체 가계비 지출에서 주거비(난방비, 수리·보수비 등)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① 부담이 전혀 안 된다 ② 부담이 거의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이 약간 된다 ⑤ 부담이 매우 크다

문6-4.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주거수준(주택 종류, 내부시설 등)이 아주 높은 계층과 아주 낮은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6-4-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7-1으로 이동)

문6-4-1. <문항 6-4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주거수준이 양극화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② 노후주택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③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
④ 직업의 차이
⑤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주택 개보수 의지 약화
⑥ 기타(무엇:)

문6-4-2. <문항 6-4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주거수준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세자금 또는 월임대료(월세) 지원
② 주택 구입 또는 신축 자금 지원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③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
- ④ 취약 계층의 난방비 지원
- ⑤ 공공(국민)임대주택 사업 확대
- ⑥ 주택 개보수 표준모델 개발·보급
- ⑦ 기타(무엇:)

7. 사회 참여 관련 사항

문7-1.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사회 참여(친목활동, 사회단체 참여, 이웃·친척과의 교류 등)가 아주 활발한 계층과 사회적으로 아주 고립된 계층(예를 들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 문항 7-1-1로 이동)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 문항 8-1으로 이동)

문7-1-1. <문항 7-1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사회 참여 수준이 양극화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 격차
- ② 직업의 차이
- ③ 교육 수준(학력)의 차이
- ④ 주거나 지리적 여건의 차이
- ⑤ 건강 문제
- ⑥ 가족 문제
- ⑦ 개인 성격상의 문제
- ⑧ 기타(무엇:)

문7-1-2. <문항 7-1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농촌사회의 사회 참여 수준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등)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자매결연 등) 구축
- 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 ③ 주민 참여행사나 프로그램 확대
- ④ 지역자치센터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개선
- ⑤ 지역 교통여건 개선
- ⑥ 사회 활동 참여 시 대체인력(농가도우미) 지원
- ⑦ 기타(무엇:)

8. 양극화 일반 관련 사항

문8-1. 귀하께서는 농촌사회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 사는 계층과 아주 못사는 계층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정말 그렇지 않다

문8-2. 이 밖에 귀하께서 농촌사회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선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Bi-polarization of Rural Society and Policy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bi-polarization of rural society, and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i-polarization.

The major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so on. The existing data were collected from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500 rural residents, asking them about their awareness on the bi-polarization of rural society.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and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summarize the data of the field survey.

According to this study, on the whole, the bi-polarization of rural society has deepened. The bi-polarization in income, employment, health, resid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has deepened. But, the bi-polarization in education was alleviated. Major causes of the bi-polarization were the lack of job opportunities, the difference of income and economic ability, and so on.

Major policy tasks to solve the bi-polarization of rural society are as follows: 1)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cessary. 2)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by the type of rural areas. 3) Post and prior measures are necessary. 4)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weak hierarchy should be reinforced. 5) Mid and long term socioeconomic measures are necessary.

Researchers: Dae Shik Park, Sang Jin Ma, Jae Man Shim

Research Period: 2006. 3 - 2006.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표 차례

표 2- 1. 사회적 배제와 관련 개념의 구분	20
표 3- 1. 지역별 표본 수 및 조사지점	24
표 3- 2. 응답자의 일반 현황	25
표 3- 3. 소득만족도의 변화	26
표 3- 4.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지수 변화(1998~2004)	26
표 3- 5. 연간 가구 총 소득	28
표 3- 6. 권역별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29
표 3- 7.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	29
표 3- 8.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30
표 3- 9. 취업상태의 변화(1997~2005)	32
표 3-10. 근무여건 만족도의 변화(1998~2002)	32
표 3-11. 권역별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 인식 정도	34
표 3-12.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주원인	35
표 3-13.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완화를 취해 필요한 정책 ..	35
표 3-14. 교육 수준의 변화(1997~2005)	36
표 3-15. 전체 교육비의 변화(1996~2004)	37
표 3-16. 사교육비의 변화(1996~2004)	38
표 3-17. 평생학습 참여의 변화(1996~2004)	38
표 3-18. 권역별 농촌사회 교육 수준(학력) 양극화 인식 정도	39
표 3-19. 권역별 농촌사회 사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40
표 3-20.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주원인	41
표 3-21.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41
표 3-22. 권역별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42
표 3-23.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 양극화의 주원인	43
표 3-24.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43

표 3-25.	주관적 건강평가의 변화(1999~2003)	46
표 3-26.	권역별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46
표 3-27.	농촌사회 건강수준 양극화의 원인	47
표 3-28.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48
표 3-29.	주택만족도의 변화(1997~2004)	50
표 3-30.	거주지역 만족도의 변화(1997~2004)	50
표 3-31.	권역별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인식 정도	51
표 3-32.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의 주원인	52
표 3-33.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52
표 3-34.	사회 참여 정도의 변화(1999~2003)	55
표 3-35.	가정생활 만족도의 변화(1998~2002)	56
표 3-36.	권역별 농촌사회 사회 참여 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57
표 3-37.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주원인	58
표 3-38.	농촌사회 사회 참여수준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58
표 3-39.	계층의식의 변화(1999~2003)	59
표 3-40.	계층이동 가능성(세대내)의 변화(1999~2003)	60
표 3-41.	계층이동 가능성(세대간)의 변화(1999~2003)	60
표 3-42.	권역별 농촌사회 전반적 양극화 인식 정도	61
표 3-43.	양극화 인식 정도의 부문간의 비교	64
표 3-44.	양극화 인식 점수의 권역별 비교	65
표 3-45.	양극화 부문간의 상관계수	66

그림 차례

그림 1- 1.	연구추진체계	8
그림 2- 1.	분포의 양극화 과정	11
그림 2- 2.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예시	12
그림 2- 3.	소득 분배 불평등과 양극화	12
그림 2- 4.	양극화 곡선	16
그림 2- 5.	로렌츠 곡선에서의 전환된 양극화 곡선	17
그림 2- 6.	사회양극화의 원인 개념도	18
그림 2- 7.	양극화의 원인	19
그림 2- 8.	빈곤에 대한 설명방식의 비교	21
그림 2- 9.	빈곤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제론의 설명방식(예시)	22
그림 3- 1.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지수 변화(1998~2004)	27
그림 3- 2.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28
그림 3- 3.	현재 종사 직업	33
그림 3- 4.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 인식 정도	34
그림 3- 5.	농촌사회 교육 수준(학력)의 양극화 인식 정도	39
그림 3- 6.	농촌사회 사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40
그림 3- 7.	농촌사회 사회교육 기회의 양극화 인식 정도	42
그림 3- 8.	I군의 W초등학교	44
그림 3- 9.	I군의 W초등학교 S분교	44
그림 3-10.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47
그림 3-11.	농촌사회 주거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51
그림 3-12.	저소득 노인가구의 주택(H군 사례)	53
그림 3-13.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주민의 주택(H군 사례)	53
그림 3-14.	농촌사회 사회 참여 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57
그림 3-15.	농촌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인식 정도	61

참 고 문 헌

- 강신욱 등.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혜 등. 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혜정. 2006.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시대와 정책 과제.” 농정연구센터 세미나발표논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양극화 선행 연구 요약보고서』.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2006. 『교육양극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정책토론회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금융경제연구원. 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 과제』. 한국은행.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5(3): 1-27.
- 김용택 등.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05.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 과제.”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pp. 125-147,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김홍중 등.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승일 등. 2005.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교육혁신모형 개발』. 농림부·농업기반공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와 정책』. 지방순회토론회 자료집.
- 민승규 등. 2006. 『소극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호. 삼성경제연구소.
- 박대식 등. 200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병현,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 185-219.
- 박민선. 1993. “1980년대 농민계층분화의 양상과 그 성격.” 『농촌사회』 3: 39~73.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박시현 등. 2005.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년도):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 간 차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방하남, 김기현.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7(4): 31~65.
- 보건복지부.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 심창학. 200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 양준호, 오승구. 200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74호. 삼성경제연구소.
- 열린정책연구원. 2005.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
- 우천식. 2005. “경제구조변화와 양극화.”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pp. 20-47.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윤성호. 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149-176.
- 윤수종. 2001. “농촌 내부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농민충분해와 농민간 갈등.” 『농촌사회』 1(2): 67-95.
-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윤주현 등. 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국토연구원.
- 윤진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와 정책』. pp. 111-146.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지방순회토론회 자료집.
-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183-209.
- 이정우. 2004. 『경제 양극화와 한국의 미래: 사회 통합의 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제4차 심포지엄 발표자료.
- 장석인. 2005. “제조업의 양극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pp. 49-71.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 정철영 등. 2002. 『21세기 지식 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BK21 결과보고서.
- 하성규. 1996. “서울의 주거빈곤 실태와 복지 증진방안.” 『도시연구』 2: 95-126.
- 홍인옥. 2005.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2005년 겨울호: 6-21.
- 황의식,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lvey, S. 2000.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5-6).
- Atkinson, A. B. 1998.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Unemployment.” in Atkinson, A. B. and Hills, J. (eds.).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pp.1-20.
- Berman, Y. and D. Phillips.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 Chakravarty, Satya and Amita Majumder. 2001. “Inequality, Polarisation and Welfare: Theory and Applications.” *Australian Economic Papers* 40: 1-13.
- Duclos, Jean-Yves, Joan Esteban, and Debraj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Esteban, Joan. 1999. “Conflict and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87: 379-415.
- Esteban, Joan and Debraj,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s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Gradin, Carlos. 2000. “Polarization by Sub-populations in Spain, 1973~91.”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4): 457-474.
- Hamnett, C. 1994. “Social Polarisation in Global Cities: Theory and Evidence.” *Urban Studies* 31: 401-424.
- Pierson, J.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Vleminckx, K. and J. Berghman. 2001. “Social Exclusion and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of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 Wang, You-Qiang and Kai-Yuen Tsui. 2000. “Polarization Orderings and New Classes of Polarization Ind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2(3): 349-363.
- Wolfson, Michael C. 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 401-421.

Zhang, Xiaobo and Ravi Kanbur. 2001. "What Difference Do Polarisation Measures Make?: An Application to Chin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7(3): 85-98.

박대식 pds8382@krei.re.kr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사회학 박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2005~현재)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2004)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2005)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방안 연구』 (2004)

마상진 msj@krei.re.kr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 박사
-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2005)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5)
『농촌지역 행정체계 혁신방안』 (2006)
『도농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각국의 정책기법연구』 (2006)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2006)

심재만 jmshim@uchicago.edu

-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계임 lkilki@krei.re.kr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2005)
-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김민정 breavemj@krei.re.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 『식품수급표』 (2004)

연구보고 R525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11.

발 행 2006.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전화 02-2263-7534 <http://www.khip.co.kr>

ISBN 978-89-6013-024-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